

KREI

농업부문 포용적 금융을 위한 금융 지원 실태 분석 연구

김미복·윤채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업부문
포용적 금융을 위한 금융 지원
실태 분석 연구**

김미복·윤채빈



연구 담당

김미복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2장, 제4장 집필

윤채빈 | 연구원 | 제3장 집필

정책연구보고 P259

농업부문 포용적 금융을 위한 금융 지원 실태 분석 연구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9. 11.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더크리홍보(주)

I S B N | 979-11-6149-394-7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금융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전량 공급받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실물경제에서 혈액과 같은 존재이다. 농업 금융도 마찬가지이다.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량의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업부문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매우 높아, 중소기업과 더불어 정책금융제도가 발달되었다. 하지만 농업이 성장함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자금 규모도 확대되어 공공투자뿐 아니라 민간 투자의 확대가 요구되고, 전달체계 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

규모화·전문화 등 농업의 발전과 고령화·양극화 등 농촌사회 변화에 대응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살펴보아야 할 시기이다. 규모가 커진 농업의 자금 조달은 동시에 필요자본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농가에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이 농업부문에 있으며, 이는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이 확장되고 역할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정책금융제도의 사각지대 계층을 규명하고, 정책금융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신규진입농, 재해 등으로 실패한 재기농, 고령 영세농의 기존 정책금융제도 활용도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9.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연구 배경과 목적

- 농업금융은 농업,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달하여 적기에 적량을 공급해 줌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킴. 또한,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내·외적 자본 제약에 따른 시장 실패 부분을 보완하는 등 궁극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담당함. 이에 농업금융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농업 발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 그동안 농업정책금융의 역할은 경제 발전 단계와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변해 왔음. 경제 발전 초기에는 농가의 자금 이용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고, 재정력이 개선되면서는 농가 지원의 주요 수단으로, 그 이후 농업 경쟁력 향상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옴.
- 최근 전답의 지가 상승률이 매우 높아졌는데, 이는 영농 시작, 농촌 이주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더불어 기존 농가에서도 농업투자를 축소하고자 하는 고령농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담보력이 소진되어 차입을 할 수 없는 농가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 전반적으로 농업금융 이용 정체 현상이 나타남.
- 저성장·저금리 기조에서 농업부문 정책금융은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정책금융제도의 사각지대 계층을 규명하고,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되고 있는지 포용적 금융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농업부문 포용적 금융

- 포용성장은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 해소, 계층 간 형평성 있는 분배,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임. 우리 농업 내 포용성장의 범위는 도농격차의 완화, 경기하락 충격의 완충 역할 강화로 빈곤층 감소, 농가구성원 간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 토지 등 자산이 부족한 신규진입농의 진입장벽 해소, 영세 고령농의 삶의 질 보장 등과 관련이 있음.
 - 포용적 금융은 사회의 불이익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기업에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금융기관들이 광범위한 금융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임.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금융소외계층의 재무건전성과 성공 잠재력을 높여주는 능력화(economic empowerment)를 강조하는 것으로, 포용적 금융이 성장과 빈곤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전술된 농업 내 여러 이슈들 역시 금융정책을 통해 농업부문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 농업부문 투자 정체, 금융 효율성 제고 필요
- 최근 고령화, 저성장 등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담보력 한계로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와 대출 조건 등이 맞지 않는 등 농업부문 투자 정체가 발생함. 이처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정부 투융자사업의 낮은 집행률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금융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개선이 필요함.

□ 신규진입농 진입장벽 존재

- 농가의 규모화·전업화 추세 강화로 초기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승계농이 아닌 신규진입농의 경영위험 규모는 커지고,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개인 자산으로 부담하기보다 시장을 활용한 투자가 바람직한데, 이는 자부담이 확대될 경우 적정 투자 규모보다 적게 투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영농 실패 후 재기 프로그램 필요

- 농업부문에서 빈곤 진입은 영농 실패로 인한 빈곤 진입과 영농 은퇴 후 빈곤 진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빈곤 진입 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회적 안정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데, 현재 영농 실패 후 재기 프로그램은 경영회생 프로그램이 유일함. 2013년 이후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지속적으로 지원율이 하락하였지만,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실적은 증가하고 있어 경영회생 지원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됨.

□ 영세고령농의 빈곤층 전략 방지

- 영세고령농의 이전소득 의존도는 매우 높는데, 특히 75세 이상 은퇴농의 소득 중 이전소득의 비중은 38%를 차지함. 2019년 농가경제에서도 70세 이상의 이전소득 비중은 60대보다도 2배 가까이 높고, 가처분 소득 및 농가경제 잉여 수준도 크게 낮은 편으로 영세고령농의 생계자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 소외계층 증가 전망

- 2013~2018년 사이 귀농인은 연평균 3.4% , 귀촌인은 연평균 3.3% 증가하였음. 귀농인으로 영농활동을 시작하거나, 타 부문에서의 고용 여건으로 인해 영농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금융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큼. 귀농인은 토지 마련과 필요한 자본 구매 등에서 자금 수요가 높고, 타 부문에서의 고용 여건으로 영농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제도가 필요함.

농업정책금융 지원 실태

□ 농업부문 정책금융 현황

- 농업경영체의 주된 자금 조달원은 정책금융으로서, 보조와 융자가 농업인의 투자자금 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조사업도 농업인의 주된 자금 공급원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총 4조 8,639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82.5%가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지원되고 있음.
- 농업정책금융은 소액다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소액 자본을 필요로 하는 농업경영체의 특성과 맞게 설계되어 왔음. 정책자금 대출 현황에서도 소액다건 특징을 알 수 있는데, 단기운영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축산경영자금이 전체 대출건수의 32.1%를 차지함. 농신보 보증에서도 1억 원

미만의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이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소액 보증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유형별 지원 실태 분석

- 농협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자금은 2019년 현재 총 17조 1,115억 원으로 대출계좌 수는 386,272계좌임. 대출계좌는 개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 3천만 원 수준의 소액을 빌린 것으로 나타남. 농·축협을 제외하면 농업회사법인과 일반 법인이 건당 7억 원 내외로 규모가 큰 자금을 활용하고 있음.
-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연령대는 주로 50~60대로, 전체 계좌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건당 대출잔액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적어지는 추세를 보여 자금규모 기준에서는 오히려 20~30대의 비중이 높음. 젊은 층의 대출계좌 건수는 5% 정도이지만 건당 금액이 큰 것으로 미루어보아 청년후계농사업 등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전체 담보별 각 연령의 대출계좌 보유 수를 살펴보면, 50대와 60대의 대출계좌 보유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함. 한편, 농신보와 부동산이 전체 담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신보는 50대(35.6%), 60대(29.8%), 40대(18.2%) 순으로, 부동산은 60대(31.3%), 50대(30.9%), 70대 이상(20.7%) 순으로 농업인에게 담보로 활용되고 있음.
 - 담보 설정 능력이 적은 40대 이하의 청년층의 경우 농신보를 활용하는 경

우가 많은 한편, 50대 이상의 장년층·고령층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음.

○ 전체 담보별 각 연령의 대출잔액 합계를 살펴보면, 40대, 50대, 60대의 대출 계좌 보유 비중이 약 80%를 차지함. 한편, 농신보와 부동산이 전체 담보의 80% 이상을 차지함. 농신보 이용 연령대로는 50대가 35.2%로 가장 높으며 60대와 40대가 비슷한 수준임. 부동산 이용 연령대는 50대(33.9%), 60대(28.0%), 40대(16.4%) 순임.

○ 대출계좌 보유 비중은 농업종합자금(53.6%), 농촌주택(23.8%), 후계농 지원 자금(6.9%) 순임. 농업종합자금사업, 후계농지원사업, 축발사업, 귀농귀촌창업지원사업,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신보를 담보로 활용하는 비율이 50% 이상임. 한편, 농촌주택사업은 담보로 부동산을 활용한 비율이 95% 수준임.

○ 대출잔액 비중은 농업종합자금(39.2%), 농촌주택(19.3), 기타(10.8%), 후계농 지원자금(9.7%) 순임. 농업종합자금사업, 후계농지원사업, 귀농귀촌창업지원사업은 농신보를 담보로 활용하는 비율이 50% 이상임. 한편, 농촌주택사업, FTA사업,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담보로 부동산을 활용한 비율이 50% 이상임.

□ 정책적 시사점

○ 농협을 통한 정책자금 17조 원 중 개인에게 대출된 금액 약 12조 원이 50대 농업인에게 집중되어 있음. 농업기계화, 농촌주택, 경영회생자금, 재해대책,

축발기금사업 등은 60대 농업인도 활발히 이용한 것으로 파악됨. 후계농업인 자금은 20~30대보다는 40대가 주된 이용자이고, 그 외 대부분의 자금은 40대보다 60대 농업인이 더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정책자금 대출조건은 금리와 상환기간을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업별로 담보 형태가 특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담보력이 약한 젊은 층보다는 50~60대에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 정책금융사업의 특성은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사업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정책자금으로 초기 창업자금, 중기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여 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을 완화하는 데 있음. 하지만, 자금사업 성격별로 규모,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음으로써 사업 효과가 저감됨.

포용적 금융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금융 과제

□ 자금의 효율적 배분으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

- 단순한 자금 조달 방식은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농업이 규모화·전문화됨에 따라 기존의 자금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투자 확대 등 다양화가 요구되지만 현재 농업금융에서는 자산을 담보로 융자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정책자금도 이러한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농업부문의 특수한 투자 환경을 고려하

여 유형별 자금 조달뿐 아니라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 지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 지원 보강

- 농업부문은 경영위험이 커 수익의 변동성이 높은 편임. 현재도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보험을 펴고 있지만, 그 외에 생산 기반이 무너진 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금융 지원 사업이 필요함.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저신용등급 기업, 개인에 대한 대출자금이 있는 타 분야와 달리 농업부문은 재해 발생 정도에 따른 구분이 없고, 소득하락분에 대한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 시 대출심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 농가 혹은 수입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농가에 한해 대출 심사 단계를 완화함으로써 금융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과대채무 농업인·농가에 재무상담 제공

- 경영회생자금과 관련하여 정책자금의 지도금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자금 지원의 사후관리는 대출기관에서의 연체율 점검에 그치고 있고, 농업종합자금이라 하더라도 당해년 재무 및 손익 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음. 경영회생자금 등 저신용 농가(부채비율이 높고 악성채무가 있는 농가)에 대한 재무상담 등은 정부와 대출기관이 매칭하여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농촌 취약계층의 생활금융 지원

- 농업부문 포용적 금융을 위해서는 영세고령농 등 농촌 취약계층의 생활금융 부족 자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 농촌 취약계층의 경우 정부 공적보조금 이외에는 자금 대출이 어려운 상황임. 현실적으로 단기 대출자금인 농축산경영자금(6백만 원 이하) 등을 생계비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대출 목적에 어긋나는 지출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할 경우 향후 경영자금 대출이 어렵게 되고, 현 대출자금에 대한 회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자금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전 자금대출, 금리가 높지만 정부지원대출인 햇살론, 사잇돌 대출 상품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9
3. 연구 내용	9

제2장 농업부문 포용적 금융

1. 포용적 금융	13
2. 농업부문 포용 금융의 필요성	16

제3장 농업정책금융 지원 실태 분석

1. 농업정책금융의 특징	37
2. 농업정책자금 지원 실태 분석	43
3.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주요 내용	59

제4장 포용적 금융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금융 과제

1. 자금의 효율적 배분으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	71
2.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 지원 보강	72
3. 과대채무 농업인·농가에 재무상담 제공	74
4. 영세고령농 등 농촌 취약계층의 생활금융 지원	75

참고문헌	77
-------------------	-----------

표 차례

제2장

〈표 2-1〉 연령별 소득구조(2017년 기준)	21
〈표 2-2〉 2018년 농림어업 취업자의 연령 및 종사상 지위별 증감(전년 대비) ...	25
〈표 2-3〉 농림어업 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영농 진입 시기	27
〈표 2-4〉 농림어업 영농진입 연차별 종사상 지위(2018, 2019년)	28
〈표 2-5〉 귀농인·귀촌인 수(2013~2018년)	31
〈표 2-6〉 귀농인의 연령대별 전업, 겸업 비중(2018년)	33

제3장

〈표 3-1〉 2018년 기준 중앙부처 보조사업 예산 현황	38
〈표 3-2〉 농식품부 보조사업 예산 현황	38
〈표 3-3〉 농식품부문 정책자금 현황	40
〈표 3-4〉 보증금액별 보증 건수 및 보증금액	41
〈표 3-5〉 사업자유형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 현황	44
〈표 3-6〉 성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 현황	44
〈표 3-7〉 연령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 현황	45
〈표 3-8〉 금리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 현황	46
〈표 3-9〉 담보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 현황	47
〈표 3-10〉 농협사업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 현황	47
〈표 3-11〉 연령별 담보별 대출계좌 보유 현황	48
〈표 3-12〉 연령별 담보별 대출잔액 현황	49
〈표 3-13〉 고객별 농협사업별 대출계좌 보유 현황	50
〈표 3-14〉 고객별 농협사업별 대출잔액 현황	51
〈표 3-15〉 고객별 농협사업별 계좌 평균 잔액 현황	52

〈표 3-16〉 농협사업별 담보별 대출계좌 보유 현황	54
〈표 3-17〉 농협사업별 담보별 대출잔액 현황	55
〈표 3-18〉 농협사업별 담보별 계좌 평균 잔액 현황	56
〈표 3-19〉 연령별 사업 지원 실태(대출금액)	57
〈표 3-20〉 연령별 사업 지원 실태(대출계좌)	57
〈표 3-21〉 연령별 담보 실태(대출금액)	58
〈표 3-22〉 연령별 담보 실태(대출계좌)	58
〈표 3-23〉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방향 및 지원 사업	59
〈표 3-24〉 잔액 기준 예외 적용	60
〈표 3-25〉 금리 우대 사항	61
〈표 3-26〉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 지원 요건	62
〈표 3-27〉 자금별 대출금리	63
〈표 3-28〉 대리대출 용자 절차	65
〈표 3-29〉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주요 변경 내용	66

제4장

〈표 4-1〉 농업경영위기(예시)	73
--------------------------	----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농업정책금융 총 잔액 추이	5
〈그림 1-2〉 농업정책금융 부채비율 추이	5
〈그림 1-3〉 농지와 전국평균지가 상승률 추이	6
〈그림 1-4〉 농가 차입금 사채 규모 및 비중	7

제2장

〈그림 2-1〉 포용적 성장·개발 모델	14
〈그림 2-2〉 포용적 성장·개발 국가 주요 성과지표	14
〈그림 2-3〉 농가부채규모 추이(2018년 기준)	17
〈그림 2-4〉 연령별 이전소득 비중과 농가경제잉여(2019년 기준)	22
〈그림 2-5〉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 동기 대비)	23
〈그림 2-6〉 종사상 지위별 농림어업 종사자 증감(전년 동기 대비)	24
〈그림 2-7〉 연령별 농림어업 종사자 증감(전년 동기 대비)	24
〈그림 2-8〉 지역별(도시/농어촌)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전년 동기 대비)	25
〈그림 2-9〉 농림어업 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영농 진입 시기	27
〈그림 2-10〉 분기·연령별 실업률(2001 1/4~2019 2/4)	29
〈그림 2-11〉 전년 동기 대비 부문별 고용증감(2017년 6월~2019년 6월)	30
〈그림 2-12〉 연령대별 귀농인 수(2013~2018년)	32
〈그림 2-13〉 연령대별 귀촌인 수(2013~2018년)	32

제3장

〈그림 3-1〉 농업정책금융 및 총차입금 규모 추이	39
〈그림 3-2〉 농가부채 중 금융기관 차입 비중 추이	43
〈그림 3-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의 연도별 지원 기업 수	67
〈그림 3-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의 연도별 평균 지원 금액	67
〈그림 3-5〉 2018년도 근로자 수별 지원 기업 현황	68
〈그림 3-6〉 연도별 지원 기업 경영성과 현황	68

제4장

〈그림 4-1〉 농가유형별 자금 조달 지원 수단 차별화	72
--------------------------------------	----

제1장

서론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농업정책금융의 역할과 외연적 성장의 정체

○ 농업금융은 농업,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달하여 적기에 적량을 공급해 줌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담당함. 농업금융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농업 발전 수준이 달라지기도 함.

- 농업은 투자 수익성이 낮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기간도 길며 기후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수성이 있어 내적·외적 자본 제약이 큰 부문임.
- 농업의 내·외적 자본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

○ 농업금융에서 정부가 자금 공급에 개입하는 정책금융은 농업의 내·외적 자본 제약에 의해 농가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것, 즉 시장 실패 부분을 보완하고 있음.

- 농업 발전에 필요한 자본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되어 왔음.

○ 그동안 농업정책금융의 역할은 경제 발전 단계와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변해옴.

- 경제 발전 초기에는 농가의 자금 이용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고(1950~60년대), 재정력이 개선되면서는 농가 지원의 주요 수단으로(1970~80년대), 그 이후에는 농업경쟁력 향상과 구조조정 수단(1990년대 이후)으로 활용되어옴(박성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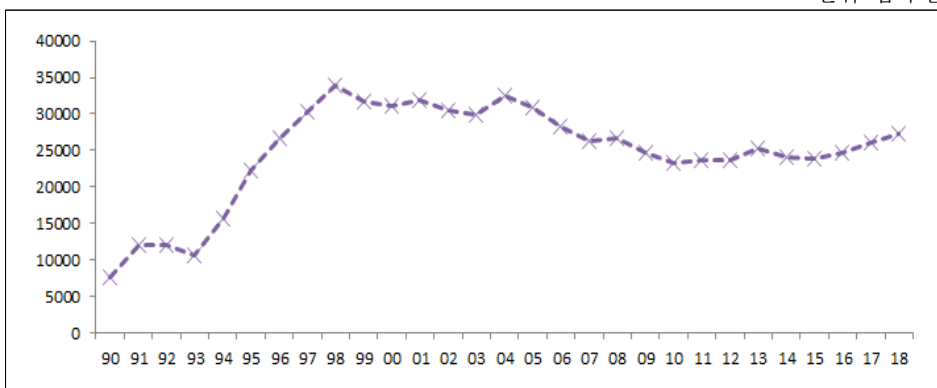
○ 농업정책자금의 연간 신규 공급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0.5조 원이고, 잔액 기준으로는 2018년 기준 27조 2,828억 원임<그림 1-1>.

- 2001년, 2004년 부채대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 부채가 장기저리 정책금융자금으로 전환되어 일시적으로 정책금융 잔액이 32조 4,960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 2000년대 들어 정책금융의 규모 확대 추세는 멈추었지만, 2017년 농신보 제도 개선 이후 일시적으로 농업정책금융 공급이 다시 확대됨.

그림 1-1 농업정책금융 총 잔액 추이

단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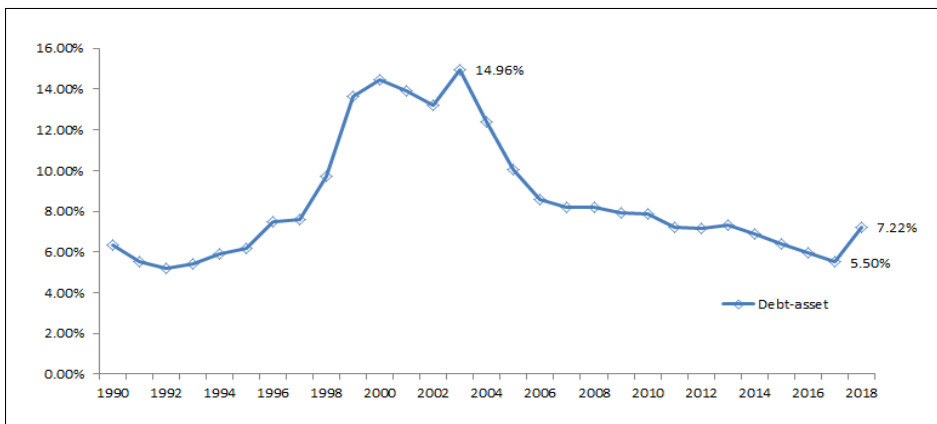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농업정책자금(융자금) 지원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농가경제조사/농림어업총조사.

○ 부채비율 역시 2000년 초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7년에는 5.5%에 불과하였다가 2018년 7.2%로 크게 상승함<그림 1-2>.

- 오랜 기간 부채비율이 하락세였지만, 2018년 농가부채액 평균이 약 25% 이상 상승하며 부채비율이 2%p가량 높아졌음.

그림 1-2 농업정책금융 부채비율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농업정책자금(융자금) 지원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농가경제조사/농림어업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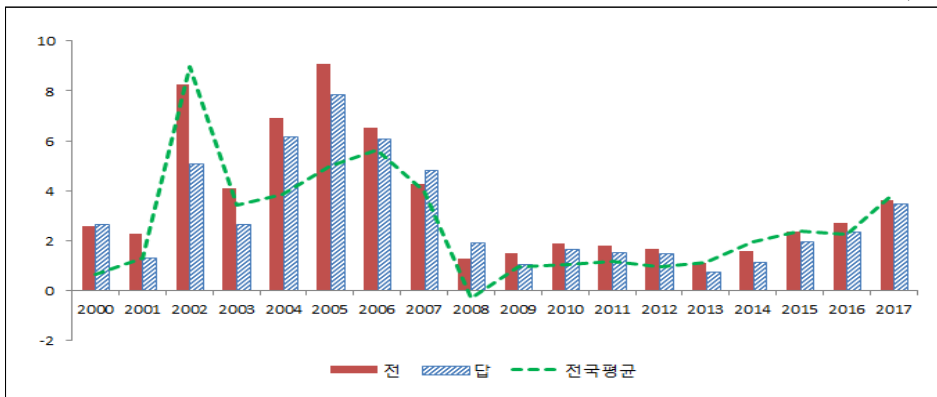
- 저성장·저금리 기조에서 농업부문 정책금융은 외연적 확대보다는 내실 즉,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되고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는지 포용적 금융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농업부문 진입장벽과 투자 정체

- 2000년대 중반 지가 상승기 이후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은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 오고 있음.
 - 특히, 최근 귀농·귀촌 인구 증가 등에 의해 도시 근교를 중심으로 전답의 지가 상승률이 매우 높은 편임.
- 지가 상승은 농업부문에서 영농 시작, 농촌 이주에 대한 진입 장벽이 됨.
 - 농림어업총조사에서도 경지면적이 없는 농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되지 않는 등 대부분 농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의 가격 상승은 농업부문에 새로 진입하려는 그룹에게 진입장벽이 됨.

그림 1-3 농지와 전국평균지가 상승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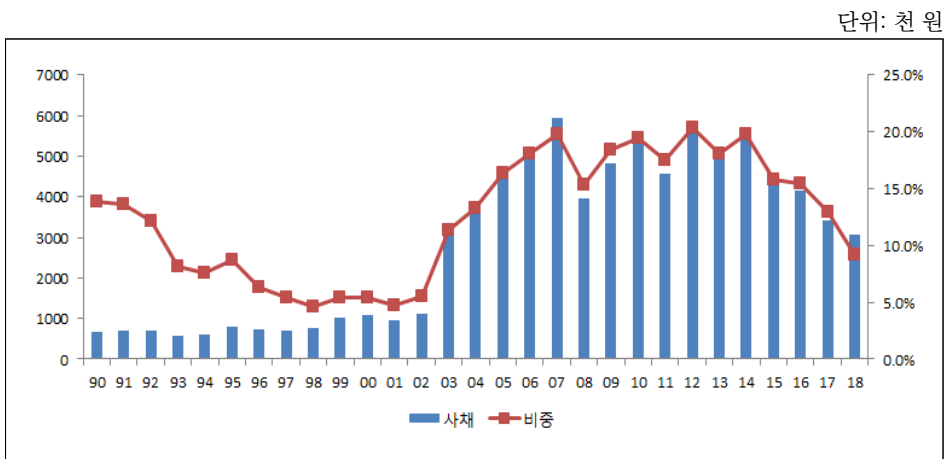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전국지가변동률조사.

○ 새로 진입하려는 농가 이외에 영농활동 중인 기존의 농가에서도 금융 이용 정
체 현상이 나타남.

○ 기존에 진입해 있는 농가의 차입 규모 정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

- 먼저 농업투자를 축소하고자 하는 고령농가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농가의 차입 규모가 정체되고 있음.
- 한편, 투자를 하고 싶더라도 담보력이 소진되어 차입할 수 없는 농가가 증가한 경우도 있음. 2000년대 이후 농가부채에서 개인 사채 비중이 증가한 것이 이를 반증하는데, 2017년 이후 사채 비중이 낮아진 것은 최근의 농신
보 제도 개선 효과를 반영함.

그림 1-4 농가 차입금 사채 규모 및 비중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농가경제조사.

1.3. 농업부문 금융 소외계층 발생

- 이제 농업정책금융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문제는 농업 내 담보력 부족 등으로 발생한 과소 투자 현상뿐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임.
- 또한, 경기 하락 등 외부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수요가 존재함.
 - 농업·농촌으로 이주하거나 농업 내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있음. 이들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후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이 필요함.
- 농업부문에서 다양한 금융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어 성장단계별 포용적 농업금융이 필요한 시점임.
 - 담보능력이 소진된 가족농, 농업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농 등 기존의 농업 금융 지원을 활용할 수 없는 농가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장단계별로 금융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 투자시장에서도 농업구조 및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야기된 금융소외계층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정책금융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규명하고, 정책금융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신규진입농, 재해 등으로 실패한 재기농, 고령 영세농 등 금융소외계층의 기존 정책금융제도 활용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정책금융 지원 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연구 내용

- ☐ 농업부문 포용적 금융
 - 포용적 금융의 정의
 - 농업부문에서의 포용적 금융
 -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금융소외계층

- ☐ 농업정책금융 지원 실태 분석
 - 농업부문 정책금융 현황
 - 유형별 지원 실태 분석
 - 정책적 시사점

- ☐ 포용적 금융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금융 과제

제2장

농업부문 포용적 금융



2

농업부문 포용적 금융

1. 포용적 금융

1.1. 포용성장과 금융

- 포용성장은 기존의 경제성장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 해소, 계층 간 형평성 있는 분배,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임.
 - 외환위기 이후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포용성장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포용발전지수를 발표하였음.
- 세계경제포럼은 15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 총 7개의 정책 지표로 포용적 성장·개발 모델을 만들었으며 총 109개국을 대상으로 전체 지표를 종합한 포용적 성장 지수를 산출함.

그림 2-1 포용적 성장·개발 모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재인용.

○ 또한, 포용적 성장 지수에 더해 ‘포용적 성장·개발 국가 주요 성과 지표’(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Key Performance Indicators)의 개발을 통해 각국의 포용적 성장 및 개발 현황을 한눈에 보고 비교할 수 있게 되었음.

그림 2-2 포용적 성장·개발 국가 주요 성과지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재인용.

○ 글로벌 범위에서 포용성장과 농업과의 관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의미함.

- 국제사회에서 성장의 과실이 국가 간, 국내 사회 구성원 간에 공유되지 못한 채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어 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음(김승준 2016).
-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극단적 빈곤층의 약 8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촌지역개발과 농업개발을 통해 포용성장을 이루고자 하였음.

○ Derek(2005)은 연구에서 농업·농촌개발과 빈곤 성장 사이의 관계를 밝혔음.

- 첫째, 성장 초기 단계에서 농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식량안보 및 식량가격의 안정에서 오는 긍정적 외부 효과는 빈곤층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남.
- 둘째, 농업부문 성장은 성장 후기 단계에서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연계되어 발전하기 때문에 성장 후기 단계에서도 농촌개발은 중요하다고 하였음.
- 셋째, 농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적어지지만, 산업구조가 변함에도 도농격차 등의 문제는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 개발을 통해 균형 잡힌 포용성장이 가능해짐.

○ 우리 농업 내 포용성장의 범위는 식량안보 등 국가 간 비교에 의한 빈곤 문제라기보다는 도농격차의 완화, 경기하락 충격의 완충 역할 강화로 빈곤층 감소, 농가구성원 간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 토지 등 자산이 부족한 신규진입농의 진입장벽 해소, 영세 고령농의 삶의 질 보장 등과 관련이 있음.

○ 포용적 금융은 사회의 불이익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영세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에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금융기관들이 광범위한 금융서비스(은행, 증권, 보험 등)를 합리적인 비용

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UN DESA Financing for Development¹⁾)함.

- 최근 포용적 금융의 새로운 추세는 단순히 금융서비스에의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에 머물지 않고 금융소외계층의 재무건전성과 성공 잠재력을 높여주는 능력화(economic empowerment)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 중심 접근법에 기초하여 금융소외자의 금융서비스 잠재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창출·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개발 프로그램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 이는 포용적 금융이 성장과 빈곤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재정수입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임.
- 전술된 농업 내 포용성장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은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개선할 수 있기도 함. 최근의 포용적 금융 추세를 반영한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을 통해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

2. 농업부문 포용 금융의 필요성

2.1. 농업부문 투자 정체로 금융 효율성 제고 필요

- 고령화, 저성장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음.
 - 60대 이상의 부채액은 점차 상승하고는 있지만, 그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60대 이하의 부채액에 비해 20~30% 수준임. 농업용 부채액은 60대 이

¹⁾ UN DESA 홈페이지를 참조함.

(<https://www.un.org/development/desa/en/key-issues/financing.html>).

상은 660만 원, 60대 이하는 3,000만 원 이상, 70대 이상은 200만~300만 원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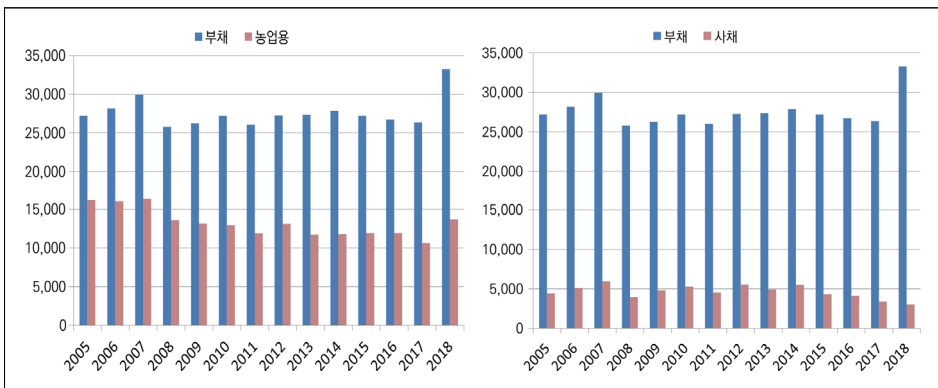
- 70대 이상 농가에 대규모 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김.

○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정부 투융자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등 투자에 대한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유동성 제약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

○ 용자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첫째,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둘째, 담보력 한계로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사업 집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임.

- 2007년까지 농가의 부채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8년 이후 하락하여 2,500만~2,700만 원대에서 정체됨. 특히, 농업용 부채는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함. 2008년 이후 1,300만 원대로 하락하여 현재 1,100만 원 수준으로 전체 부채의 43%에 불과함.

그림 2-3 농가부채규모 추이(2018년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농가경제조사.

- 유동성 제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특히, 고령화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아닌 신규진입농의 유동성 제약은 정부의 정책금융 효율성 제고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임.

○ 투자를 더 하고 싶은 농가의 경우 소요 자본 규모가 높을 뿐 아니라 대출기관의 대출한도, 담보한도, 신용한도 등에 있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고, 전체 대출잔액이 정체되었음. 최근 농신보 제도 개선 이후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농가의 유동성 경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용자사업 집행률이 낮은 것은 현재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와 대출 조건 등이 맞지 않기 때문임.

○ 재정투융자 방향 설정에 있어 그간 보조방식보다 용자 등 금융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지향해 왔으나 현재 용자사업 집행률은 저조한 수준임.

-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산지유통종합자금, 식품산업육성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집행률은 73%로 다소 저조함.

○ 특히 농식품부 용자사업 중 많은 사업이 보조와 용자, 자부담 지원방식을 혼합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담보 제약으로 인해 용자 지원에 대해 낮은 선호도를 보임.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서(유찬희 외 2015), 점검지역 생산자(31개 농가)들은 용자자금을 적게 이용하는 대신 사업시행지침서보다 높은 금액을 자부담하고 있었음. 총 사업비 중 용자 비중은 평균 7.6%에 그친 반면, 자부담 비중은 43.1%에 달했음.

- 점검지역 생산자 31개 농가 중 21개 농가는 용자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음.

- 해당 생산자의 연도별 총 사업비 중 융자 비중은 0.0%(09년)~19.8%(12년)였음.

2.2. 신규진입농 농업 내 진입장벽 존재

- 과거에 비해 농업의 전업화 추세가 강해지고 농업 내 핵심농가인 전문농가의 영농기반 확대에 따라 자금 수요의 규모가 커졌음.
 - 농가인구의 감소 추세에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핵심농가는 규모화·전업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 3ha 이상 경종농가 비중은 1995년 4.7%에서 2000년 6.3%, 2005년 7.4%, 2010년 8.2%로 증가함(2015년 기준).
 - 축산 전업농의 경우에도 젓소 50두 이상의 비중은 2005년 50.6%에서 2010년 66.7%로 증가하였고, 돼지 1,000두 이상인 농가의 비중도 25.0%에서 43.8%로 크게 증가하였음(2015년 기준).
-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자산으로 부담하기보다 시장을 활용한 투자가 바람직함. 자부담이 확대될 경우, 적정 투자 규모보다 적게 투자될 가능성이 있음.
- 영농 규모화로 초기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승계농이 아닌 신규진입농의 경영위험 규모는 커지고,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

2.3. 영농 실패 이후 재기 프로그램 필요

○ 농업부문에서 빈곤 지위의 이행과 관련된 사건은 빈곤 진입과 빈곤 탈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빈곤 진입은 영농 실패로 인한 빈곤 진입과 영농 은퇴 후 빈곤 진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빈곤 진입 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회적 안정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영농 실패 후 재기 프로그램은 경영회생 프로그램이 유일한데, 농업경영회생자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해당됨.

- 농업경영회생자금은 2003년 처음 지원되었으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율이 하락하여 2017년 지원실적은 49억 원으로 지원율이 계획 대비 8.2% 수준에 불과함(임소영 외 2018).
- 하지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실적은 증가하고 있어 경영회생지원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됨.

2.4. 영세고령농의 빈곤층 전략 방지

2.4.1. 영세고령농의 가계지출과 소득수준

○ 영세고령농의 이전소득 의존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실질적 은퇴 연령을 75세 정도로 보았을 때, 75세 미만 농가의 소득은 3,510만 원이고 그중 농업소득은 약 26%를 차지함(김미복 외 2016).

○ 75세 이상의 실질적으로 은퇴하였을 것이라 보이는 농가의 소득은 2,200만원으로 75세 미만과 비교하여 같은 고령소농이라 하더라도 62%에 불과한 소득수준임.

- 특히, 75세 이상 은퇴농의 소득 중 이전소득의 비중은 38%로 정부의 공적연금 등 제도 의존도가 높음.

표 2-1 연령별 소득구조(2017년 기준)

단위: 천 원

소득구분	75세 미만	75세 이상
농가소득	35,100	22,000
농업소득	9,371	5,250
농외소득	12,500	5,332
겸업소득	3,869	1,131
사업 외 소득	8,647	4,200
이전소득	10,800	8,479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농가경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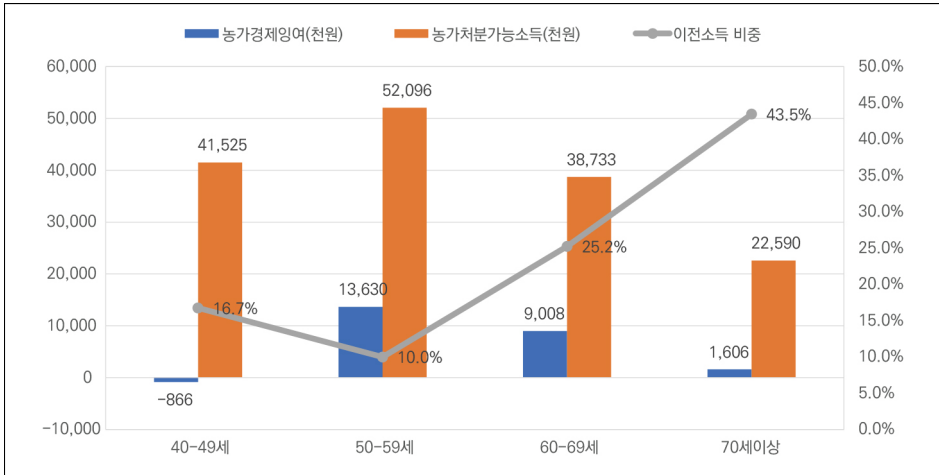
○ 유찬희 외(2019)에 의하면 2018년 소규모/적자²⁾ 농가 비중은 29.3%로 2008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평균 농가소득이 1,290만 원에 불과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농가경제잉여 적자 폭이 확대되었음.

- 평균 총수입은 2,463만 원에서 2,272만 원으로 7.8% 감소하였음. 농가소득과 농가경제잉여도 각각 14.5%, 42.7% 감소하였음.
- 이전소득(농가소득 중 50.2%)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이었고, 농외소득 비중도 41.3%임.

○ 2019년 농가경제에서도 70세 이상의 이전소득 비중은 60대보다도 2배 가까이 높고, 가처분 소득 및 농가경제잉여 수준도 크게 낮은 편으로 생계자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²⁾ 농가 유형 구분 기준은 특정 연도 개별 농가의 총수입이 당해 연도 전체 표본 농가의 총수입 중윗값보다 많은지 여부(대규모(L)/소규모(S)), 농가경제잉여가 0 이상인지 여부(흑자(B)/적자(R))임.

그림 2-4 연령별 이전소득 비중과 농가경제잉여(2019년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농가경제조사.

○ 소규모 농가에 실효성 있는 경영안정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세고령농의 가계 자금 지원 정책은 단기 금융자금 지원으로 가능하지만, 현재 농업경영자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임에도 영농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물리적 노동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2.5. 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 소외계층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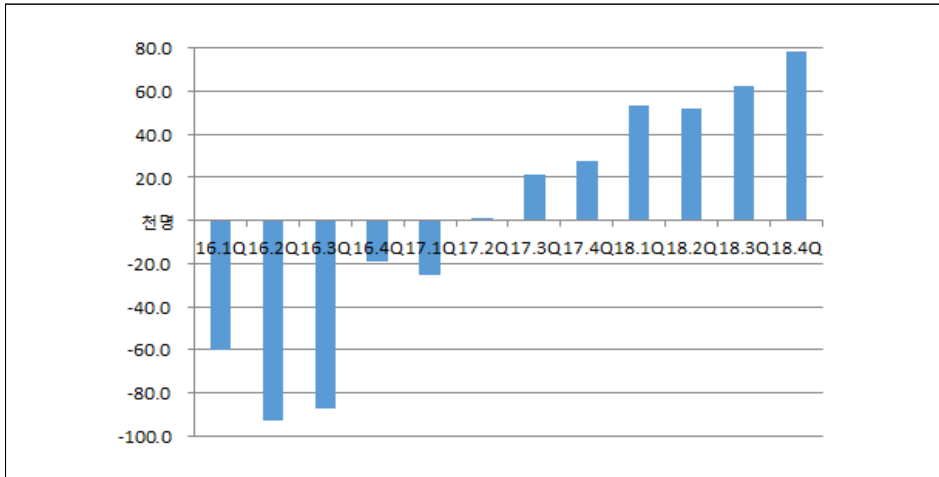
2.5.1. 농림어업 취업자 추세 변화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감소해 옴. 구체적으로 1976년 551.4만 명에서 2017년 127.9만 명으로 감소함(연평균 3.6% 감소).

- 1980년대 초반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영향과 1997년 IMF 구제금융 여파로 인한 일시적인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도 있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감소 추세임.

○ 그러나 2017년 2분기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림 2-5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 (전년 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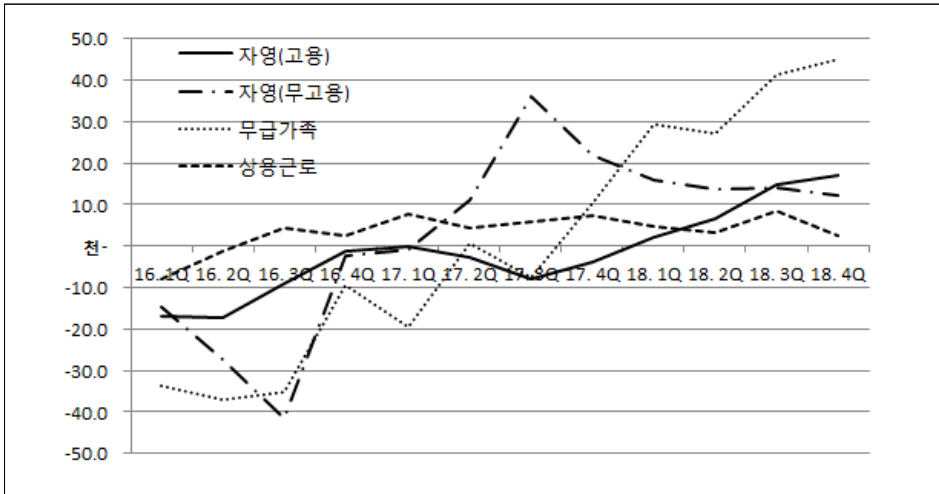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상진 외(2019).

○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 수의 증가를 종사상 지위별·연령대별로 구분하여 특징적인 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2016년 하반기 이후부터 상용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7년 이후부터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 내 고용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다.
- 연령구조의 특징을 분석하면, 전년 동기 대비 30대 이하, 60대 이상의 연령 구간에서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함. 60대 이상에서 농림어업 종사자 수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종사상 지위별·연령대별 증가를 함께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고용 있는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형태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고, 40대에서는 고용 있는 자영업자에서 전년 대비 농림어업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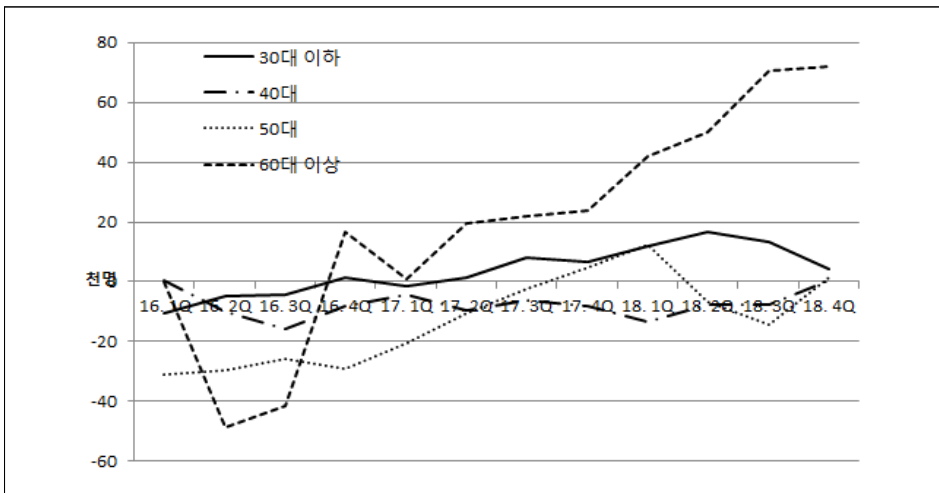
자 수가 증가함. 50대에서는 무급가족 종사자, 60대에서는 고용 있는 자영업자, 고용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에서 증가하였음.

그림 2-6 종사상 지위별 농림어업 종사자 증감(전년 동기 대비)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상진 외(2019).

그림 2-7 연령별 농림어업 종사자 증감(전년 동기 대비)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상진 외(2019).

표 2-2 2018년 농림어업 취업자의 연령 및 종사상 지위별 증감(전년 대비)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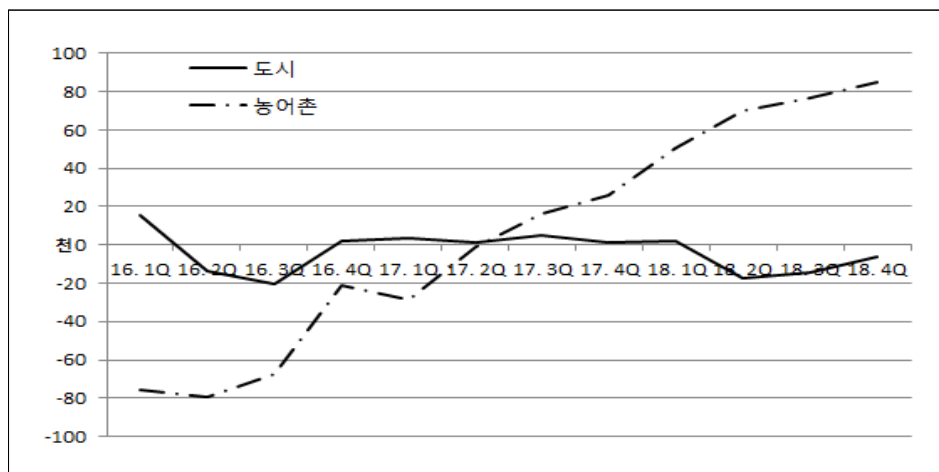
연령	종사상 지위						합
	고용 있는 자영업자	고용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30대 이하	1.9	-1.8	0.0	6.4	4.1	0.9	11.6
40대	1.3	-4.7	-0.6	-2.0	1.1	-2.2	-7.1
50대	0.6	-2.6	4.1	0.2	-3.2	-0.8	-1.8
60대 이상	6.9	22.6	32.4	0.1	0.8	-4.0	58.8
전체	10.7	13.5	35.8	4.8	2.8	-6.1	61.5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상진 외(2019).

○ 지역으로 구분하면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농어촌 지역에서는 2017년 2분기 이후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급증하였고, 도시 지역에서는 2016년 4분기 이후 취업자 감소에서 상승으로 돌아섰으나, 2018년 1분기 이후 감소하고 있음.

그림 2-8 지역별(도시/농어촌)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전년 동기 대비)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상진 외(2019).

2.5.2.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 추세

○ 2017년 2분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림어업 취업자 중, 고용노동력인 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특징은 전 연령대에 걸쳐 영농경험이 낮은 취업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임<표 2-3>, <그림 2-9>.

- 2016년에는 농림어업 취업자 중 71.0%는 3년 전에 농림어업부문의 일을 시작했다고 응답함.
- 2017년에는 2년 전이라고 응답한 취업자 비율이 70.0%로 대다수를 차지함.
- 2018년에는 1년 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7.6%, 2년 전은 7.6%임.
- 2019년에는 1년 미만인 비율이 60.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1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2.9%였음.

○ 최근에 나타나는 월급(또는 일당)을 받고 일하는 취업자들의 영농경험은 길게 형성되지 않고 있음.

- 2016년의 경우, 현재의 일을 최소한 3년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 6월 기준으로 1년 미만과 1년 동안 농림어업에 종사했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즉, 2019년 농림어업 고용노동력 대부분은 2018년과 2019년에 농림어업 부문에 취업했다는 것을 의미함.

표 2-3 농림어업 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영농 진입 시기

단위: %, 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년 미만	-	-	-	60.5
1년	-	-	67.6	12.9
2년	-	70.1	7.6	3.8
3년	71.0	6.0	3.0	2.3
4년	9.3	5.8	3.8	3.6
5~10년	9.9	9.5	10.3	9.0
11~20년	6.9	4.9	4.8	4.2
총 응답자 수	3,537	3,370	3,287	1,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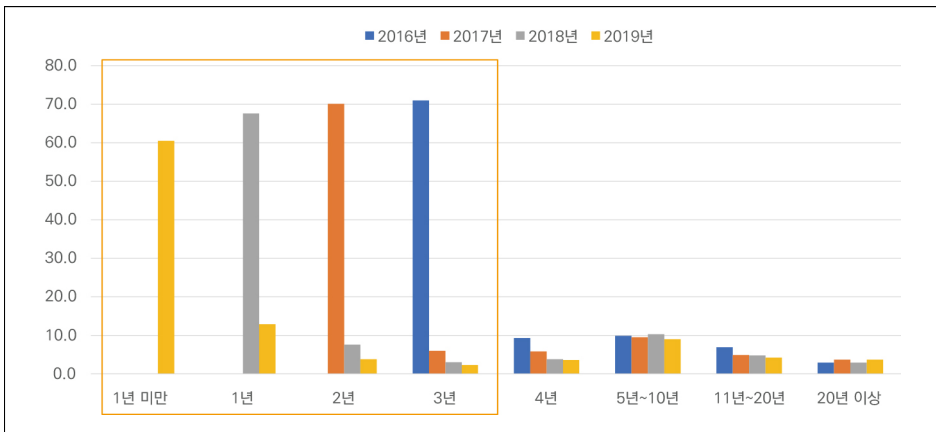
주 1) 위 수치는 가중치와 월별 구분을 반영하지 않은 pooled된 값임.

2) 2019년 총 응답자 수는 2019년 6월까지 공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수치임.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2-9 농림어업 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영농 진입 시기

단위: %



주: 위수치는 가중치와 월별 구분을 반영하지 않은 pooled된 값임.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최근에 유입된 영농경험이 적은 농림어업 취업자들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농림어업에 진입하는 비중이 높음.

- 2018년 6월 기준 농림어업에 진입한 지 1년이 되는 사람들의 종사상 지위는 일용근로자가 81.4%, 임시근로자는 16.5%, 상용근로자는 2.1%였음.

- 2019년 6월 기준 2019년에 농림어업에 진입한 사람들의 종사상 지위는 일용근로자가 72.0%, 임시근로자는 21.2%, 상용근로자는 6.8%였음.
- 2019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해당 연도의 농림어업 고용노동력은 2017년부터 급격히 유입되었다는 것과 일용근로자로서 진입이 우세한 가운데,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서 진입하는 비중도 증가하였음.

○ 2018년 농림어업 고용노동력 대부분은 2017년에 농림어업에 진입하였고, 2019년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대부분 진입하였음. 진입하고 있는 종사상 지위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형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4>.

○ 이는 농업의 계절적 특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노동공급자의 관점에서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직업 이동이 쉽다는 것을 말함. 이는 농림어업부문의 진입하기 전인 2017년과 2018년 이전에는 타 부문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표 2-4 농림어업 영농진입 연차별 종사상 지위(2018, 2019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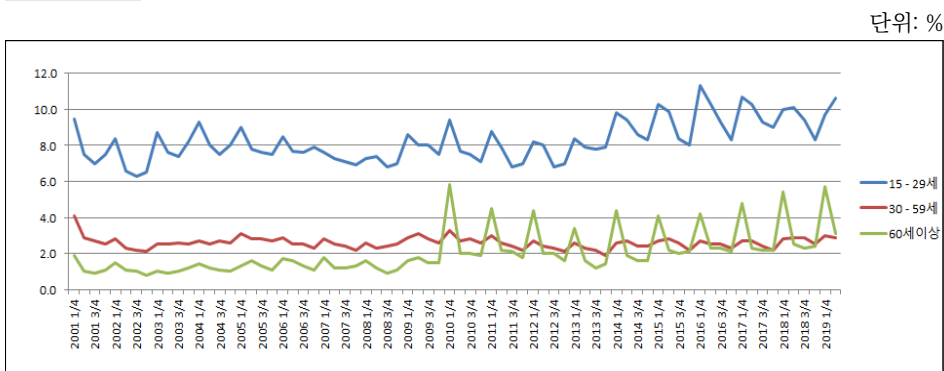
구분 월	2018년 1년차 종사상 지위				2019년 1년차 미만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소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소계
1	5.5	1.8	92.7	34,271	0.0	7.6	92.4	37,573
2	5.0	4.0	91.0	39,876	0.0	18.7	81.3	43,918
3	2.8	9.1	88.1	68,926	4.2	24.9	70.9	59,105
4	2.0	11.7	86.3	82,425	5.1	28.2	66.6	77,304
5	1.6	20.3	78.1	97,165	4.3	20.9	74.8	93,621
6	2.1	16.5	81.4	100,903	6.8	21.2	72.0	96,687
7	8.6	23.3	68.0	72,071	-	-	-	-
8	12.5	21.7	65.8	63,000	-	-	-	-
9	10.5	18.8	70.7	80,364	-	-	-	-
10	8.0	17.0	75.0	93,486	-	-	-	-
11	6.9	15.6	77.6	108,382	-	-	-	-
12	9.2	21.4	69.4	75,793	-	-	-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5.3. 외부 경기 변화와 농업 고용의 역할

- 연령에 따른 실업률을 분기별로 나타내면 <그림 2-10>과 같음. 실업률 증감은 시기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분기별 실업률은 연령대별로 증감을 반복하지만, 2014년 1/4분기부터 증가 추세를 보임. 특히, 30세 이하 연령 그룹과 60세 이상 연령 그룹에서의 실업률 증가 추세가 눈에 띄게 나타남.
- 앞의 <표 2-2>에서 보듯이, 농림어업부문의 고용노동력 증가가 대부분 30대 이하와 40대가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농림어업부문의 고용이 타 부문의 실업을 일부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음. 즉, 농림어업부문의 고용이 타 부문 실업에 대해 완충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농림어업 생산성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타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경기 상황에 따라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일부는 농림어업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더욱이 2016년 이후로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가 농림어업에 진입하는 시기가 더욱 빨라졌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함.

그림 2-10 분기·연령별 실업률(2001 1/4~2019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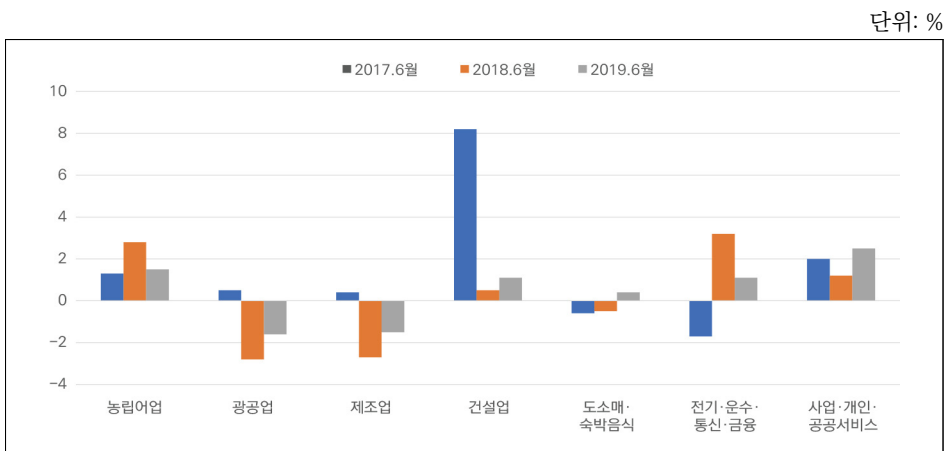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 더불어 농림어업부문의 경우 이중노동시장으로 형성되어있어 병립하는 타부문 이중노동시장(영세 제조업·자영업자·건설업)의 경기 상황 악화는 농림어업부문의 취업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림 2-11>은 부문별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감을 나타냄. 구체적으로, 6월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부문별 고용증감을 나타냄. 2018년 이후로 전년 동기 대비 광공업, 제조업에서 고용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업에서 고용이 둔화됨. 이와 반대로 농림어업에서 고용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그림 2-11 전년 동기 대비 부문별 고용증감(2017년 6월~2019년 6월)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7년 6월 기준 도소매·숙박·음식점업(-0.5%p), 전기·운수·통신·금융업(-1.9%p)을 제외한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2018년부터 변화됨.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는 광공업은 2.8%p, 제조업은 2.7%p 감소하였고, 건설업 고용은 2017년 8.1%p 증가에서 2018년 0.5%p로 둔화됨. 이에 반해 농림어업 고용은 2.8%p 증가하였음.

- 2019년 6월 기준 부문별 고용증감은 2018년과 비슷한 추세로 나타남. 즉, 광공업은 전년 동기 대비 1.6%p, 제조업은 1.5%p 감소하였고, 건설업은 1.1%p 증가하였음. 농림어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1.6%p 증가함.

2.5.4. 은퇴 인구 증가에 기인한 농업부문 가족 노동력 취업자 증가

- 이와 동시에 최근 귀농·귀촌의 증가가 농림어업 가족노동력(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취업자 수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 2013~2018년 사이 귀농인은 연평균 3.4% 증가하였고 귀촌인은 연평균 3.3% 증가하였음.

표 2-5 귀농인·귀촌인 수(2013~2018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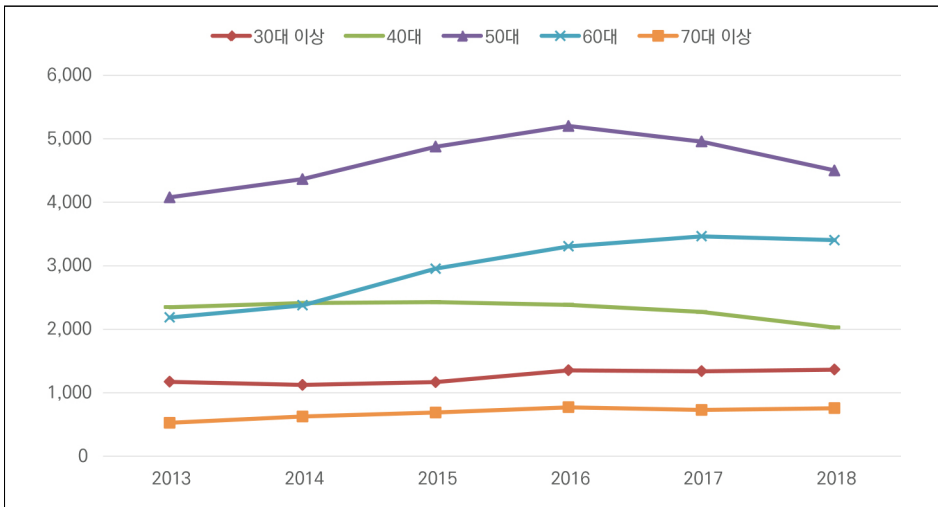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3~18 연평균 증가율
귀농인	10,312	10,904	12,114	13,019	12,763	12,055	3.4%
귀촌인	405,452	439,535	466,778	475,489	497,187	472,474	3.3%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귀농어·귀촌인 통계.

- 연령대로 구분하면 귀농인의 경우 50대와 6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귀촌인은 30세 미만, 30대 비중이 가장 큼. 귀농인은 2016년을 기점으로 50대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60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귀촌인은 2017년 이후로 30세 미만, 30대는 감소하고, 60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림 2-12 연령대별 귀농인 수(2013~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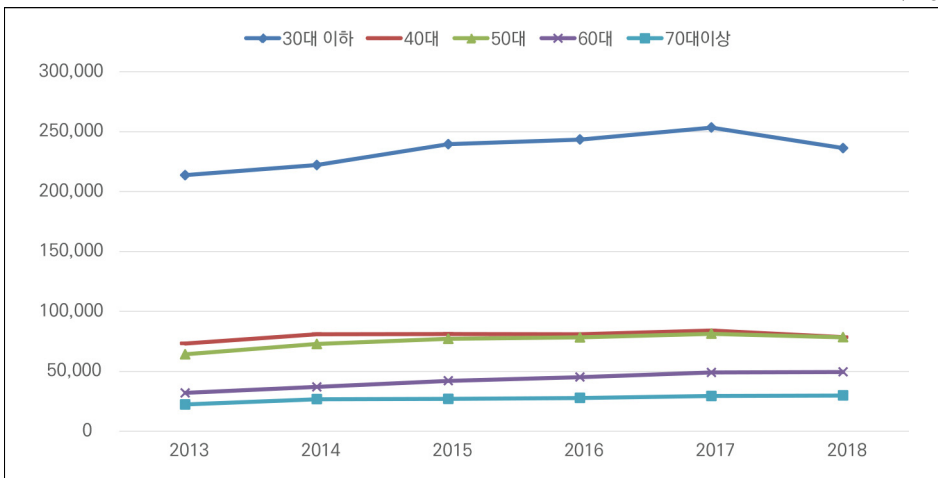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귀농어·귀촌인 통계.

그림 2-13 연령대별 귀촌인 수(2013~2018년)

단위: 명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귀농어·귀촌인 통계.

- 60대 귀농인의 증가는 앞서 언급한 <표 2-2>의 무급가족 종사자 수 증가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를 일부 설명함. <표 2-6>에서 살펴보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전업농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60대부터 그 비율이 증가하여 60대 전업농 비율은 79.7%, 70대는 92.6%임. 이는 많은 수의 60~70대가 가족농의 형태로 영농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즉, 무급가족 종사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로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귀농인으로 영농활동을 시작하거나, 타 부문에서의 고용 여건으로 인해 영농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금융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큼.
 - 귀농인은 토지를 포함한 기반 마련 등에서 자금 수요가 높고, 타 부문에서의 고용 여건으로 영농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재기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필요함.
 - 현재 농업정책금융 지원이 이러한 신규 진입 인력에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2-6 귀농인의 연령대별 전업, 겸업 비중(2018년)

단위: 명

전·겸업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업	62.6%	63.6%	66.0%	79.7%	92.6%
겸업	37.4%	36.4%	34.0%	20.3%	7.4%
인구 수 합계	1,365	2,028	4,502	3,403	757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귀농어·귀촌인 통계.

제3장

농업정책금융 지원 실태 분석



3

농업정책금융 지원 실태 분석

1. 농업정책금융의 특징

1.1. 농업·농촌부문 자금 조달

1.1.1. 보조·융자 중심의 자금 조달

- 보조와 융자방식은 농업부문에서 가장 일반화된 자금 조달 방식임.
 - 농업경영체의 주된 자금 조달원은 정책금융으로, 농업인의 투자자금 조달에서 보조와 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농식품부 보조사업은 2018년 기준 6.4조 원으로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9.6%를 차지함으로써 보건복지부 다음으로 규모가 큼.
 - 농식품부 소관 2018년 예산 기준 보조사업은 44.8%를 차지함.

표 3-1 2018년 기준 중앙부처 보조사업 예산 현황

중앙부처	예산액(억 원)	비중(%)
보건복지부	308,221	46
농림축산식품부	64,478	9.6
국토교통부	58,667	8.8
고용노동부	53,682	8
환경부	44,188	6.6
문화체육관광부	33,709	5
산업통상자원부	21,179	3.2
행정안전부	12,948	1.9
해양수산부	10,558	1.6
산림청	10,431	1.6
중소벤처기업부	9,253	1.4

주: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정보는 이월액 등 조정을 포함한 예산정보로 국회 확정 예산편성액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https://opn.gosims.go.kr/>).

○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보조사업도 농업인의 주된 자금 공급원임<표 3-2>.³⁾

-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총 4조 8,639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82.5%가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지원되고 있음.

표 3-2 농식품부 보조사업 예산 현황

단위: 개, 억 원

수행기관 유형	수행기관 수	수행보조사업 수	국고보조금	평균보조금
보조사업자(민간 등)	2,338	3,920	8,492	1.6
기초자치단체	226	11,420	29,641	1.9
광역자치단체	17	2,342	10,506	3.4
합계	2,581	17,682	48,639	6.9

자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https://opn.gosims.go.kr/>).

³⁾ 민간 보조사업자는 개인을 제외한 자료로 법인에 대한 지원만 포함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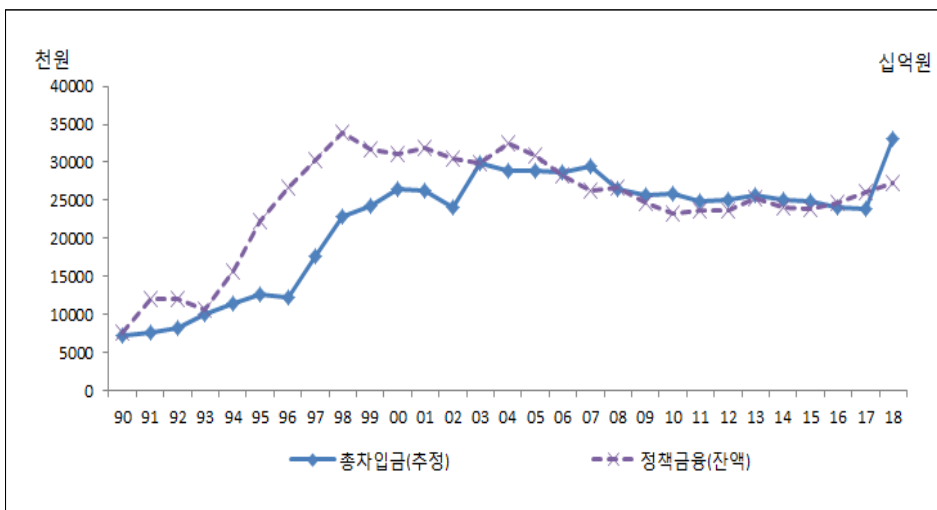
○ 시군 단위의 보조사업은 소액사업이 많아 다수의 농업인에게는 정부보조사업의 역할이 큼.

- 기초지자체는 지자체당 50개 이상의 농업부문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당 평균 보조금이 2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조금 이외에 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역시 민간보다는 주로 정부로부터 이루어짐.

- 정책금융잔액과 농가의 금융기관 차입총액을 비교했을 때 농가의 자금 조달처는 민간보다는 주로 정부지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기준 정책금융 총 잔액은 총 차입금의 102%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의 차입금 대부분을 정책금융이 차지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음.

그림 3-1 농업정책금융 및 총차입금 규모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농림어업총조사.

1.1.2. 소액다건 정책금융사업

- 농식품부문 용자사업은 기금과 회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계정과목의 수만 해도 400여 개 이상임.
- 구조개선자금, 종합자금, 여러 기금에서 중장기 용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농업경영체의 신규투자, 재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은 정책자금 용자가 가장 일반적인 방식임.
- 농업정책금융은 소액다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소액 자본을 필요로 하는 농업경영체의 특성에 맞게 설계됨.
- 정책자금 대출 현황에서도 소액다건 특징을 알 수 있음.
- 단기운영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축산경영자금이 전체 대출 건수의 32.1%를 차지함.

표 3-3 농식품부문 정책자금 현황

단위: 천, 억 원

주요 사업	대출 건수		대출잔액	
농축산경영자금	382,967	32.1%	19,518	10.9%
농업종합자금	212,471	17.8%	42,503	23.7%
농어촌구조개선자금	128,263	10.8%	28,459	15.8%
촉발기금	56,809	4.8%	25,038	13.9%
농안기금	662	0.1%	4,554	2.5%
농촌주택자금	122,578	10.3%	25,563	14.2%
농가부채대책	254,743	21.4%	25,624	14.3%
기타	334,44	2.8%	8,649	4.8%
계	1,191,937	100.0%	179,608	100.0%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2012. 12. 31. 기준 정책자금 대출 현황).

○ 농신보 보증에서도 소액 보증이 주를 이루고 있어 1억 원 미만의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이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투자 자본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음.

- 농신보 보증금액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2천만 원 이하 소액 보증이 57.6%(건수 기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정책자금 용자 한도 기준이 포함된 5천만 원~1억 원 구간 비중은 18.5%임.

표 3-4 보증금액별 보증 건수 및 보증금액

단위: 건, 억 원, (%)

보증금액	2016년 11월	
	건수	금액
2천만 원 이하	278,153 (57.6)	21,392 (17.6)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145,569 (30.1)	35,132 (28.9)
5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18,327 (3.8)	8,888 (7.3)
7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18,818 (3.9)	13,659 (11.2)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808 (4.3)	33,204 (27.3)
5억 원 초과~7억 원 이하	703 (0.1)	3,223 (2.6)
7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76 (0.1)	2,999 (2.5)
10억 원 초과	265 (0.1)	3,162 (2.6)
계	483,119 (100)	121,659 (100)

자료: 김미복 외(2016b: 27) 재인용.

1.2. 농업정책금융에 의존도가 높아 효율적 지원 필요

○ 농업부문은 시장 실패로 인해 민간시장금융보다는 정책금융을 주로 활용해 왔음.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적 기능이 강조되어옴.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여러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 실패의 보완, 경제 발전 지원 등 소극적 혹은 적극적 정책금융의 역할을 모두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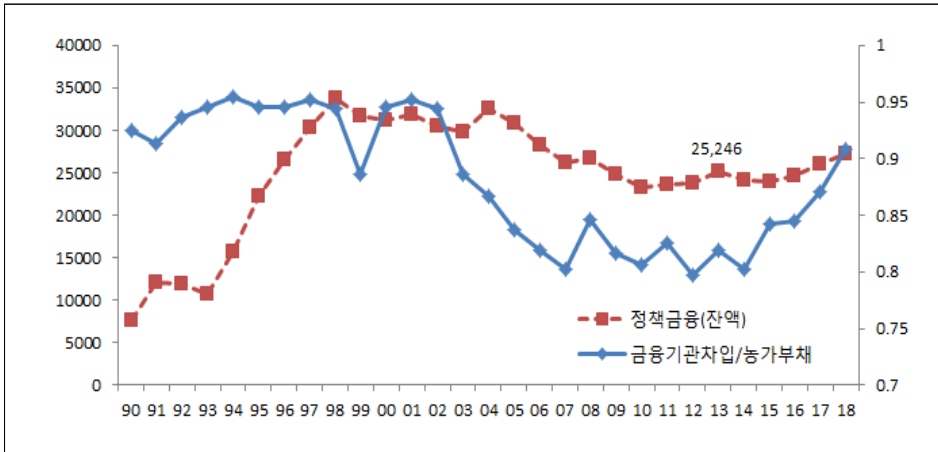
- 저금리, 저성장 환경에서 정부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이 요구됨.
 - 저리용자에 대한 장점이 저감됨에 따라 일반대출, 신용대출을 활용하고 싶어도 금융기관의 보수적 운용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의 신규대출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또한 고령화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와 여러 대외 여건 변화로 농업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투자를 하더라도 고정자산에 대한 재투자에 그치고 있어 농업정책금융 잔액은 정체되어 있음.
 - 정책금융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농가의 부채 용도는 주로 가계용이 확대되고 있어 농업경영 활동에 대한 금융 지원 역할이 필요함. 가계용은 2003년도 2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7년 기준 농가부채 중 33%를 차지하고 있음.

- 농가부채 중 금융기관 차입 비중은 2002년도 94%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6년도까지 85% 아래에서 정체되었다가 반등하였음. 사채 이용 증가 이후 최근 감소하고 있음.
 - 즉, 농가의 금융기관 이용이 담보력 부족으로 정체되었다가 최근 농신보 보증 확대 등으로 다소 상승하였지만, 정책금융 총 잔액과 비교해 볼 때 아직 민간투자를 크게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음.

그림 3-2 농가부채 중 금융기관 차입 비중 추이

단위: 십억 원,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농가경제조사.

2. 농업정책자금 지원 실태 분석

2.1. 지원 실태

○ 농협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자금은 2019년 현재 총 17조 1,115억 원으로 대출계좌 수는 38만 6,272계좌임.

- 이 중 신규대출액은 7.1조 원임.

○ 대출계좌는 개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 3천만 원 수준의 소액을 빌린 것으로 나타남. 농·축협을 제외하면 농업회사법인과 일반 법인이 건당 7억 원 내외로 규모가 큰 자금을 활용하고 있음.

- 대출잔액 측면에서 개인은 67%, 회사법인 11%, 농업법인 4%, 농·축협이 6%를 차지하고 있음.

표 3-5 사업자유형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 현황

단위: 건, 십억 원

구분	계좌 보유 수		대출잔액		평균 잔액(백만 원)
개인	374,404	96.9%	11,398	66.6%	30
개인사업자	5,151	1.3%	950	5.6%	184
농업회사법인	992	0.3%	682	4.0%	688
농·축협	586	0.2%	1,027	6.0%	1,753
영농조합법인	1,505	0.4%	672	3.9%	447
회사법인(상법상)	2,476	0.6%	1,894	11.1%	765
기타	1,158	0.3%	488	2.9%	421
합계	386,272	100.0%	17,112	100.0%	44

자료: 농협 내부자료.

○ 농협의 대출계좌 성비는 매우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이 80% 이상의 계좌건수, 잔액 기준으로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 농업 부문에서 여성의 독립적인 금융 활동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임.

표 3-6 성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 현황

단위: 건, 십억 원

구분	계좌 보유 수		대출잔액		평균 잔액(백만 원)
남성	322,260	83.4%	10,174	59.5%	32
여성	57,320	14.8%	2,176	12.7%	38
사업자	6,692	1.7%	4,761	27.8%	711
합계	386,272	100.0%	17,112	100.0%	44

자료: 농협 내부자료.

○ 정책자금을 주로 이용하는 농업인의 연령대는 50~60대로 전체 계좌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규모 기준에서는 오히려 20~30대에서 크게 나타남. 건당 대출잔액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적어지는 추세를 보임.

- 특히 60대 개인은 건수는 많지만, 평균 잔액이 2,600만 원에 그쳐 전체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되지 않고 50대가 가장 활발하게 자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젊은 층의 대출계좌 건수는 5% 정도이지만 건당 금액이 큰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젊은 층에 대한 정책사업은 많지는 않지만, 청년후계농사업 등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 3-7 연령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 현황

단위: 건, 십억 원

구분	계좌 보유 수		대출잔액		평균 잔액(백만 원)
20대 이하	3,963	1.0%	311	1.8%	78
30대	17,738	4.6%	1,040	6.1%	59
40대	53,924	14.0%	2,373	13.9%	44
50대	122,026	31.6%	4,255	24.9%	35
60대	121,570	31.5%	3,187	18.6%	26
70대 이상	60,360	15.6%	1,181	6.9%	20
해당 없음	6,691	1.7%	4,761	27.8%	712
합계	386,272	100.0%	17,112	100.0%	44

자료: 농협 내부자료.

○ 금리별로 보면, 대부분 2~2.5%대 금리조건을 가지고 있고, 금리가 높은 자금 보다는 낮은 자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1% 이하인 초저금리 자금의 잔액 11.3%로 나타났고 평균 잔액이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 농지 관련 자금은 저금리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금리가 2.0~2.5%인 경우 비중이 71.8%(계좌 수), 51.7%(잔액)로 가장 높으며 금리 1.0~1.5%(13.8%/20.9%), 금리 1.5~2.0%(11.1%/11.0%) 순임.
- 계좌보유 수와 대출잔액 모두 금리 2.0~2.5%, 1.0~1.5% 순으로 비중이 높음.
- 계좌보유 1건당 대출잔액(평균 잔액)은 금리가 1% 이하인 경우 12억 8천만 원, 금리 3% 이상인 경우 1억 3천만 원 순으로 타 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3-8 금리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 현황

단위: 건, 십억 원

구분	계좌 보유 수		대출잔액		평균 잔액
1% 이하	1,518	0.4%	1,942	11.3%	1.28
1.0~1.5%	53,190	13.8%	3,580	20.9%	0.07
1.5~2.0%	42,984	11.1%	1,883	11.0%	0.04
2.0~2.5%	277,489	71.8%	8,845	51.7%	0.03
2.5~3.0%	7,638	2.0%	334	2.0%	0.04
3% 이상	3,418	0.9%	448	2.6%	0.13
-	35	0.0%	78	0.5%	2.23
합계	386,272	100.0%	17,112	100.0%	0.04

자료: 농협 내부자료.

○ 대부분의 담보는 농신보와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 담보별 대출계좌 수는 농신보(40.1%), 부동산(37.0%), 신용보증(22.3%) 순으로 비중을 차지함. 담보별 대출잔액은 부동산(41.3%), 농신보(40.5%), 신용보증(15.9%) 순임.
- 담보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 모두 농신보, 부동산 두 부문이 전체의 80% 수준을 차지함.

○ 농신보보다는 일반 보증서, 예금담보가 평균 잔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계좌보유 1건당 대출잔액(평균 잔액)은 보증서의 경우 1억 6천만 원, 예금의 경우가 1억 2천만 원 순으로 다른 담보에 비해 높은 수준의 평균 잔액을 나타냄.

표 3-9 담보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 현황

단위: 건, 십억 원

구분	계좌 보유 수		대출잔액		평균 잔액
농신보	155,026	40.1%	6,930	40.5%	0.04
부동산	143,097	37.0%	7,061	41.3%	0.05
신용	85,955	22.3%	2,718	15.9%	0.03
보증서	1,402	0.4%	231	1.3%	0.16
예금	753	0.2%	93	0.5%	0.12
동산	4	0.0%	0.05	0.0%	0.01
해당 없음	35	0.0%	78	0.5%	2.23
합계	386,272	100.0%	17,112	100.0%	0.04

자료: 농협 내부자료.

○ 농협사업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은 농업종합자금, 농촌주택사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한편, 계좌 보유 1건당 대출잔액(평균 잔액)은 귀농귀촌창업지원사업의 경우 1억 1천만 원으로 타 사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평균 잔액을 가짐.

표 3-10 농협사업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 현황

단위: 건, 십억 원

구분	계좌 보유 수		대출잔액		평균 잔액
농업종합자금	206,974	53.6%	6,704	39.2%	0.03
농촌주택	92,012	23.8%	3,303	19.3%	0.04
후계농 지원자금	26,700	6.9%	1,663	9.7%	0.06
축발사업	20,381	5.3%	1,498	8.8%	0.07
FTA사업	17,696	4.6%	1,096	6.4%	0.06
귀농귀촌창업지원	7,728	2.0%	867	5.1%	0.11
재해복구 및 대책	6,888	1.8%	52	0.3%	0.01
기타 ¹⁾	5,327	1.4%	1,853	10.8%	0.35
농업경영회생자금	2,566	0.7%	78	0.5%	0.03
합계	386,272	100.0%	17,112	100.0%	0.04

주: 농협사업 중 기타농업 정책자금, 농안사업, 농업기계화, 농업인저리자금,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을 합하여 기타로 표시함.

자료: 농협 내부자료.

○ 전체 담보별 각 연령의 대출계좌 보유 수를 살펴보면, 50대와 60대의 대출계좌 보유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함.

- 한편, 농신보와 부동산이 전체 담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신보는 50대(35.6%), 60대(29.8%), 40대(18.2%) 순으로, 부동산은 60대(31.3%), 50대(30.9%), 70대 이상(20.7%) 순으로 농업인에게 담보로 활용되고 있음.
- 담보 설정 능력이 적은 40대 이하의 청년층의 경우 농신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한편, 50대 이상의 장년층·고령층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음.

표 3-11 연령별 담보별 대출계좌 보유 현황

단위: 건, (%)

구분	농신보	동산	보증서	부동산	신용	예금	해당 없음	합계
20대 이하	2,560 (1.7)	-	-	1,067 (0.8)	331 (0.4)	5 (0.8)	-	3,963 (1.0)
30대	10,317 (6.7)	-	7 (8.2)	5,375 (3.8)	2,019 (2.4)	20 (3.2)	-	17,738 (4.7)
40대	27,899 (18.2)	-	16 (18.8)	17,602 (12.5)	8,338 (9.8)	69 (11.0)	-	53,924 (14.2)
50대	54,513 (35.6)	1 (25.0)	35 (41.2)	43,605 (30.9)	23,697 (28.0)	175 (27.8)	-	122,026 (32.1)
60대	45,690 (29.8)	1 (25.0)	24 (28.2)	44,167 (31.3)	31,428 (37.1)	260 (41.3)	-	121,570 (32.0)
70대 이상	12,170 (7.9)	2 (50.0)	3 (3.5)	29,212 (20.7)	18,873 (22.3)	100 (15.9)	-	60,360 (15.9)
해당 없음	1,877	-	1,317	2,069	1,269	124	35	6,691
합계 ¹⁾	153,149 (100.0)	4 (100.0)	85 (100.0)	141,028 (100.0)	84,686 (100.0)	629 (100.0)	0 (0)	379,581 (100.0)

주: 1) 해당 없음을 제외한 합계임.

자료: 농협 내부자료.

○ 전체 담보별 각 연령의 대출잔액 합계를 살펴보면, 40대, 50대, 60대의 대출
계좌 보유 비중이 약 80%를 차지함.

- 한편, 농신보와 부동산이 전체 담보의 80% 이상을 차지함. 농신보 이용 연
령대로는 50대가 35.2%로 가장 높으며 60대와 40대가 비슷한 수준임. 부
동산 이용 연령대는 50대(33.9%), 60대(28.0%), 40대(16.4%) 순임.

표 3-12 연령별 담보별 대출잔액 현황

단위: 십억 원, (%)

구분	농신보	동산	보증서	부동산	신용	예금	해당 없음	합계
20대 이하	214 (3.6)	-	-	91 (1.6)	6 (1.1)	0.2 (0.7)	-	312 (2.5)
30대	647 (11.0)	-	2 (13.3)	366 (6.2)	25 (4.2)	0.7 (2.6)	-	1,041 (8.4)
40대	1,322 (22.4)	-	2 (13.3)	962 (16.4)	84 (15.2)	4 (14.8)	-	2,374 (19.2)
50대	2,073 (35.2)	0.012 (26.1)	5 (33.3)	1,984 (33.9)	182 (32.9)	11 (40.7)	-	4,255 (34.5)
60대	1,344 (22.8)	0.012 (26.1)	5 (33.3)	1,643 (28.0)	187 (33.8)	9 (33.3)	-	3,188 (25.8)
70대 이상	293 (5.0)	0.023 (50.0)	0.6 (4.0)	814 (13.9)	71 (12.8)	3 (11.1)	-	1,181 (9.6)
해당 없음	1,037		216	1,200	2,165	66	78	4,761
합계 ¹⁾	6,930 (100.0)	0.046 (100.0)	231 (100.0)	7,061 (100.0)	2,718 (100.0)	93 (100.0)	78 (100.0)	17,112 (100.0)

주: 1) 해당 없음을 제외한 합계임.

자료: 농협 내부자료.

○ 농협사업별 고객의 대출계좌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종합자금사업을 비
롯하여 농촌주택사업, 후계농지원자금 등 전반적인 사업들에서 개인 및 개인
사업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농협사업은 농업종합자금(53.5%), 농촌주택(23.8%), 후계농 지원자금
(6.9%)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표 3-13 고객별 농협사업별 대출계좌 보유 현황

단위: 건, (%)

구분	FTA 사업	귀농귀촌 창업지원	농업경영 회생자금	농업 종합자금	농촌주택	재해복구 및 대책	축발사업	후계농 지원자금	기타 ¹⁾	합계
개인	16,715 (94.5)	7,464 (96.6)	2,542 (99.1)	203,207 (98.2)	90,484 (98.3)	6,852 (99.5)	17,855 (87.6)	26,304 (98.5)	2,981 (56.0)	374,404 (96.9)
개인사업자	503 (2.8)	260 (3.4)	6 (0.2)	884 (0.4)	1,516 (1.6)	11 (0.2)	1,284 (6.3)	395 (1.5)	292 (5.5)	5,151 (1.3)
회사법인 (상법상법인)	69 (0.4)	-	-	1,945 (0.9)	-	1 (0.0)	177 (0.9)	-	284 (5.3)	2,476 (0.6)
영농조합법인	237 (1.3)	-	12(0.5)	430 (0.2)	-	18 (0.3)	494 (2.4)	1 (0.0)	313 (5.9)	1,505 (0.4)
농업회사법인	135 (0.8)	-	6 (0.2)	487 (0.2)	-	5 (0.1)	224 (1.1)	-	135 (2.5)	992 (0.3)
농지개량조합	-	-	-	-	-	-	-	-	991 (18.6)	991 (0.3)
농·축협	34 (0.2)	-	-	1 (0.0)	-	-	326 (1.6)	-	225 (4.2)	586 (0.2)
농업 관련 기관 기타	1 (0.0)	-	-	8 (0.0)	-	-	6 (0.0)	-	49 (0.9)	64 (0.0)
기타	-	4 (0.1)	-	9 (0.0)	12 (0.0)	-	-	-	0 (0.0)	25 (0.0)
농협경제지주	-	-	-	-	-	-	13 (0.1)	-	8 (0.2)	21 (0.0)
정부투자기관	-	-	-	-	-	-	-	-	20 (0.4)	20 (0.0)
지방정부	-	-	-	-	-	-	-	-	14 (0.3)	14 (0.0)
공공비영리법인	-	-	-	-	-	-	-	-	8 (0.2)	8 (0.0)
회사 이외의 법인 (사단, 재단)	1 (0.0)	-	-	-	-	-	1 (0.0)	-	4 (0.1)	6 (0.0)
일반협동조합 및 연합회	-	-	-	3 (0.0)	-	-	1 (0.0)	-	0 (0.0)	4 (0.0)
저축기관	1 (0.0)	-	-	-	-	-	-	-	2 (0.0)	3 (0.0)
고유(납세)번호 부여단체 (80, 89)	-	-	-	-	-	1 (0.0)	-	-	0 (0.0)	1 (0.0)
중앙회	-	-	-	-	-	-	-	-	1 (0.0)	1 (0.0)
합계	17,696 (100.0)	7,728 (100.0)	2,566 (100.0)	206,974 (100.0)	92,012 (100.0)	6,888 (100.0)	20,381 (100.0)	26,700 (100.0)	5,327 (100.0)	386,272 (100.0)

주: 1) 농협사업 중 기타농업 정책자금, 농안사업, 농업기계화, 농업인저리자금, 미국종합처리장 사업을 합하여 기타로 표시함.

자료: 농협 내부자료.

○ 농협사업별 고객의 대출잔액은 개인(66.6%), 회사법인(상법상법인)(11.1%), 농·축협(6.0%) 순임. 한편, 농협 사업별로는 농업종합자금사업, 농촌주택사업의 비중이 약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특히, 귀농귀촌 창업지원, 농업경영 회생자금, 농촌주택, 재해복구 및 대책, 후계농 지원자금 등은 대출자가 개인인 경우가 90% 이상임.

표 3-14 고객별 농협사업별 대출잔액 현황

단위: 십억 원, (%)

구분	FTA사업	귀농귀촌 창업지원	농업경영 회생자금	농업 종합자금	농촌주택	재해복구 및 대책	축발사업	후계농 지원자금	기타 ¹⁾	합계
개인	635 (57.9)	833 (96.2)	72 (92.3)	4,272 (63.7)	3,209 (97.2)	49 (94.2)	671 (44.8)	1,624 (97.7)	33 (1.8)	11,398 (66.6)
회사법인 (상법상법인)	55 (5.0)	-	-	1,482 (22.1)	-	0.1 (0.2)	127 (8.5)	-	229 (12.4)	1,894 (11.1)
농·축협	40 (3.6)	-	-	3 (0.0)	-	-	375 (25.0)	-	610 (32.9)	1,028 (6.0)
개인사업자	182 (16.6)	33 (3.8)	0.3 (0.4)	385 (5.7)	94 (2.8)	0.5 (1.0)	114 (7.6)	39 (2.3)	103 (5.6)	950 (5.6)
농업회사법인	86 (7.8)	-	2 (2.6)	329 (4.9)	-	0.06 (0.1)	73 (4.9)	-	191 (10.3)	683 (4.0)
영농조합법인	94 (8.6)	-	3 (3.8)	226 (3.4)	-	2 (3.8)	76 (5.1)	0.02 (0.0)	272 (14.7)	672 (3.9)
농업 관련 기관 기타	0.01 (0.0)	-	-	4 (0.1)	-	-	4 (0.3)	-	337 (18.2)	344 (2.0)
농협경제지주	-	-	-	-	-	-	56 (3.7)	-	45 (2.4)	102 (0.6)
농지개량조합	-	-	-	-	-	-	-	-	13 (0.7)	13 (0.1)
지방정부	-	-	-	-	-	-	-	-	10 (0.5)	10 (0.1)
회사 이외의 법인 (사단, 재단)	3 (0.3)	-	-	-	-	-	2 (0.1)	-	2 (0.1)	7 (0.0)
공공비영리법인	-	-	-	-	-	-	-	-	3 (0.2)	3 (0.0)
일반협동조합 및 연합회	-	-	-	2 (0.0)	-	-	0.3 (0.0)	-	-	3 (0.0)
저축기관	0.02 (0.0)	-	-	-	-	-	-	-	3 (0.2)	3 (0.0)
기타	-	0.3 (0.0)	-	0.1 (0.0)	0.5 (0.0)	-	-	-	-	0.9 (0.0)

(계속)

구분	FTA사업	귀농귀촌 창업지원	농업경영 회생자금	농업 종합자금	농촌주택	재해복구 및 대책	축발사업	후계농 지원자금	기타 ¹⁾	합계
정부투자기관	-	-	-	-	-	-	-	-	0.4 (0.0)	0.4 (0.0)
고유(납세)번호 부여단체 (80, 89)	-	-	-	-	-	0.1 (0.0)	-	-	-	0.1 (0.0)
중앙회	-	-	-	-	-	-	-	-	0.01 (0.0)	0.01 (0.0)
합계	1,096 (100.0)	866 (100.0)	78 (100.0)	6,704 (100.0)	3,303 (100.0)	52 (100.0)	1,498 (100.0)	1,663 (100.0)	1,853 (100.0)	17,112 (100.0)

주: 1) 농협사업 중 기타농업 정책자금, 농안사업, 농업기계화, 농업인저리자금,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을 합하여 기타로 표시함.

자료: 농협 내부자료.

○ 고객에 따른 농협사업별 대출계좌 1건당 평균 잔액을 살펴보면 법인 중에서도 농업 관련 기관 기타가 53억 8천만 원, 농협경제지주가 48억 6천만 원, 농·축협이 17억 5천만 원 순임.

- 앞선 자료의 계좌 수 및 잔액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던 개인의 경우 사업별 대출 1건당 평균 잔액은 3천만 원 수준으로 나타남.
- 고객별 농협사업별 대출계좌 1건당 평균 잔액은 약 4천만 원 수준임.

표 3-15 고객별 농협사업별 계좌 평균 잔액 현황

단위: 십억 원

구분	FTA사업	귀농귀촌 창업지원	농업경영 회생자금	농업 종합자금	농촌주택	재해복구 및 대책	축발사업	후계농 지원자금	기타 ¹⁾	합계
농업 관련 기관기타	0.01	-	-	0.50	-	-	0.67	-	6.88	5.38
농협경제지주	-	-	-	-	-	-	4.31	-	5.63	4.86
농축협	1.18	-	-	3.00	-	-	1.15	-	2.71	1.75
회사 이외의 법인 (사단, 재단)	3.00	-	-	-	-	-	2.00	-	0.50	1.17
저축기관	0.02	-	-	-	-	-	-	-	1.50	1.00
회사법인 (상법상법인)	0.80	-	-	0.76	-	0.10	0.72	-	0.81	0.76

(계속)

구분	FTA사업	귀농귀촌 창업지원	농업경영 회생자금	농업 종합자금	농촌주택	재해복구 및 대책	축발사업	후계농 지원자금	기타 ¹⁾	합계
일반협동조합 및 연합회	-	-	-	0.67	-	-	0.30	-	-	0.75
지방정부	-	-	-	-	-	-	-	-	0.71	0.71
농업회사법인	0.64	-	0.33	0.68	-	0.01	0.33	-	1.41	0.69
영농조합법인	0.40	-	0.25	0.53	-	0.11	0.15	0.02	0.87	0.45
공공비영리법인	-	-	-	-	-	-	-	-	0.38	0.38
개인사업자	0.36	0.13	0.05	0.44	0.06	0.05	0.09	0.10	0.35	0.18
고유(납세)번호 부여단체 (80, 89)	-	-	-	-	-	0.10	-	-	-	0.10
기타	-	0.08	-	0.01	0.04	-	-	-	-	0.04
개인	0.04	0.11	0.03	0.02	0.04	0.01	0.04	0.06	0.01	0.03
정부투자기관	-	-	-	-	-	-	-	-	0.02	0.02
농지개량조합	-	-	-	-	-	-	-	-	0.01	0.01
중앙회	-	-	-	-	-	-	-	-	0.01	0.01
합계	0.06	0.11	0.03	0.03	0.04	0.01	0.07	0.06	0.35	0.04

주: 1) 농협사업 중 기타농업 정책자금, 농안사업, 농업기계화, 농업인저리자금,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을 합하여 기타로 표시함.

자료: 농협 내부자료.

○ 대출계좌 보유 비중은 농업종합자금(53.6%), 농촌주택(23.8%), 후계농 지원 자금(6.9%) 순으로 농업종합자금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농업종합자금사업, 후계농지원사업, 축발사업, 귀농귀촌창업지원사업,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신보를 담보로 활용하는 비율이 50% 이상임.
- 한편, 농촌주택사업은 담보로 부동산을 활용한 비율이 95% 수준임.

표 3-16 농협사업별 담보별 대출계좌 보유 현황

단위: 건, %

구분	농신보	동산	보증서	부동산	신용	예금	해당 없음	합계
농업종합자금	112,073 (72.3)	-	269 (19.2)	26,778 (18.7)	67,628 (78.7)	226 (30.0)	-	206,974 (53.6)
농촌주택	1,083 (0.7)	4 (100.0)	4 (0.3)	90,704 (63.4)	173 (0.2)	44 (5.8)	-	92,012 (23.8)
후계농지원자금	15,271 (9.9)	-	10 (0.7)	10,106 (7.1)	1,254 (1.5)	59 (7.8)	-	26,700 (6.9)
축발사업	12,169 (7.8)	-	6 (0.4)	3,238 (2.3)	4,751 (5.5)	217 (28.8)	-	20,381 (5.3)
FTA사업	3,141 (2.0)	-	10 (0.7)	7,465 (5.2)	6,977 (8.1)	103 (13.7)	-	17,696 (4.6)
귀농귀촌창업지원	5,826 (3.8)	-	7 (0.5)	1,718 (1.2)	176 (0.2)	1 (0.1)	-	7,728 (2.0)
재해복구 및 대책	3,011 (1.9)	-	-	1,437 (1.0)	2,405 (2.8)	35 (4.6)	-	6,888 (1.8)
기타 ¹⁾	1,204 (0.8)	-	1,096 (78.2)	982 (0.7)	1,955 (2.3)	55 (7.3)	35 (100.0)	5,327 (1.4)
농업경영회생자금	1,248 (0.8)	-	-	669 (0.5)	636 (0.7)	13 (1.7)	-	2,566 (0.7)
합계	155,026 (100.0)	4 (100.0)	1,402	143,097	85,955	753	35	386,272 (100.0)

주: 1) 농협사업 중 기타농업 정책자금, 농안사업, 농업기계화, 농업인저리자금,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을 합하여 기타로 표시함.

자료: 농협 내부자료.

○ 대출잔액 비중은 농업종합자금(39.2%), 농촌주택(19.3), 기타(10.8%) 후계농 지원자금(9.7%) 순임.

- 농업종합자금사업, 후계농지원사업, 귀농귀촌창업지원사업은 농신보를 담보로 활용하는 비율이 50% 이상임.
- 한편, 농촌주택사업, FTA사업,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담보로 부동산을 활용한 비율이 50% 이상임.

표 3-17 농협사업별 담보별 대출잔액 현황

단위: 십억 원, %

구분	농신보	동산	보증서	부동산	신용	예금	해당 없음	합계
농업종합자금	3,871 (55.9)	-	163 (70.6)	1,870 (26.5)	776 (28.6)	24 (25.8)	-	6,704 (39.2)
농촌주택	83 (1.2)	0.04 (100.0)	0.08 (0.0)	3,216 (45.5)	3 (0.1)	1 (1.1)	-	3,303 (19.3)
기타 ¹⁾	206 (3.0)	-	59 (25.5)	247 (3.5)	1,237 (45.5)	26 (28.0)	78	1,853 (10.8)
후계농 지원자금	1,039 (15.0)	-	0.74 (0.3)	599 (8.5)	22 (0.8)	2 (2.2)	-	1,663 (9.7)
축발사업	621 (9.0)	-	4 (1.7)	284 (4.0)	564 (20.8)	25 (26.9)	-	1,498 (8.8)
FTA사업	357 (5.2)	-	3 (1.3)	623 (8.8)	98 (3.6)	15 (16.1)	-	1,096 (6.4)
귀농귀촌창업지원	698 (10.1)	-	1 (0.4)	161 (2.3)	5 (0.2)	0.04 (0.0)	-	866 (5.1)
농업경영회생자금	31 (0.4)	-	-	41 (0.6)	5 (0.2)	0.3 (0.3)	-	78 (0.5)
재해복구 및 대책	24 (0.3)	-	-	20 (0.3)	7 (0.3)	0.4 (0.4)	-	52 (0.3)
합계	6,930 (100.0)	0.04 (100.0)	231 (100.0)	7,061 (100.0)	2,718 (100.0)	93 (100.0)	78 (100.0)	17,112 (100.0)

주: 1) 농협사업 중 기타농업 정책자금, 농안사업, 농업기계화, 농업인저리자금,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을 합하여 기타로 표시함.

자료: 농협 내부자료.

- 담보별 농협사업별 대출계좌 1건당 평균 잔액을 살펴보면, 기타 사업이 3억 5천만 원, 귀농귀촌창업지원사업이 1억 1천만 원, 축발사업이 7천만 원 수준임.
- 농협사업별 담보별 대출계좌 1건당 평균 잔액은 약 4천만 원 수준임.

표 3-18 농협사업별 담보별 계좌 평균 잔액 현황

단위: 십억 원

구분	농신보	동산	보증서	부동산	신용	예금	해당 없음	합계
기타 ¹⁾	0.17	-	0.05	0.25	0.63	0.47	2.23	0.35
귀농귀촌창업지원	0.12	-	0.14	0.09	0.03	0.04	-	0.11
축발사업	0.05	-	0.67	0.09	0.12	0.12	-	0.07
후계농 지원자금	0.07	-	0.07	0.06	0.02	0.03	-	0.06
FTA사업	0.11	-	0.30	0.08	0.01	0.15	-	0.06
농촌주택	0.08	0.01	0.02	0.04	0.02	0.02	-	0.04
농업종합자금	0.03	-	0.61	0.07	0.01	0.11	-	0.03
농업경영회생자금	0.02	-	-	0.06	0.01	0.02	-	0.03
재해복구 및 대책	0.01	-	-	0.01	0.00	0.01	-	0.01
합계	0.04	0.01	0.16	0.05	0.03	0.12	2.23	0.04

주: 1) 농협사업 중 기타농업 정책자금, 농안사업, 농업기계화, 농업인저리자금,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을 합하여 기타로 표시함.

자료: 농협 내부자료.

2.2. 시사점

□ 농업정책자금은 사업 성격과 무관하게 50대 농업인에 집중

○ 대출기관인 농협은행을 통한 사업은 크게 11개로 구분이 됨.

- 사업 구분: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지원자금, 귀농귀촌창업지원, 재해복구자금, 축발기금사업, 농안기금사업, FTA기금사업, 농촌주택, 경영회생자금, 농가부채대책 등

○ 농협을 통한 정책자금 17조 원 중 개인에게 대출된 금액은 약 12조 원임. 각 연령대별로 고루 대출된 사업자금은 거의 없음.

- 대부분 50대에 주로 정책자금이 지원되었고, 농업기계화, 농촌주택, 경영회생자금, 재해대책, 축발기금사업 등은 60대 농업인도 활발히 이용한 것으로 파악됨.

- 후계농업인 자금은 40대가 주된 이용자이고, 50대가 30대보다 더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자금은 40대보다 60대 농업인이 더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많이 늘어났지만, 사업 지원 실태로 보면 후계농 지원자금도 20~30대보다는 40대 이상에서 지원받고 있음.

표 3-19 연령별 사업 지원 실태(대출금액)

단위: 천만 원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개인)
FTA사업	1.0%	7.0%	17.8%	36.2%	29.6%	8.4%	816,778
귀농귀촌창업지원	2.3%	15.7%	29.7%	37.5%	14.4%	0.5%	865,682
농업경영회생자금	0.0%	2.5%	13.4%	44.1%	31.1%	8.8%	72,761
농업종합자금	0.9%	6.5%	16.8%	37.2%	30.4%	8.2%	4,657,853
농촌주택	0.6%	4.2%	13.9%	32.8%	29.4%	19.1%	3,303,003
미국종합처리장	0.0%	0.0%	36.8%	22.5%	30.9%	9.7%	56,519
재해복구 및 대책	0.3%	2.1%	11.7%	34.2%	37.0%	14.8%	49,576
축발사업	1.0%	7.4%	17.8%	36.7%	30.3%	6.7%	785,751
후계농지원자금	12.7%	20.5%	32.7%	26.6%	7.0%	0.5%	1,662,798

자료: 농협 내부자료.

표 3-20 연령별 사업 지원 실태(대출계좌)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개인)
FTA사업	0.2	2.9	12.4	33.0	34.1	17.4	100.0
귀농귀촌창업지원	2.1	13.8	29.0	37.8	16.6	0.6	100.0
기타농업정책자금	0.4	3.9	15.2	37.0	32.1	11.3	100.0
농업경영회생자금	0.0	1.2	12.8	40.7	35.6	9.7	100.0
농업종합자금	0.4	3.5	12.9	33.1	35.3	14.8	100.0
농촌주택	0.4	2.7	10.8	29.5	31.4	25.2	100.0
미국종합처리장	0.0	0.0	8.9	32.1	46.4	12.5	100.0
재해복구 및 대책	0.1	1.1	6.9	30.1	40.1	21.7	100.0
축발사업	0.7	5.5	15.3	36.4	33.8	8.3	100.0
후계농지원자금	8.7	19.4	34.2	28.0	9.0	0.7	100.0

자료: 농협 내부자료.

□ 연령별 담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 집중 현상 발생

○ 농업정책자금 대출조건은 금리와 상환기간을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업별로 담보 형태가 특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담보력이 약한 젊은 층보다는 50~60대에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표 3-21 연령별 담보 실태(대출금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개인)
농신보	3.6%	11.0%	22.4%	35.2%	22.8%	5.0%	5,893,521
동산	0.0%	0.0%	0.0%	26.1%	26.1%	50.0%	46
보증서	0.0%	11.7%	14.3%	35.3%	34.7%	4.0%	15,311
부동산	1.5%	6.2%	16.4%	33.9%	28.0%	13.9%	5,860,226
신용	1.1%	4.5%	15.1%	32.8%	33.7%	12.7%	553,416
예금	0.7%	2.6%	12.9%	39.9%	31.3%	12.4%	27,586
합계	2.5%	8.4%	19.2%	34.5%	25.8%	9.6%	12,350,108

자료: 농협 내부자료.

표 3-22 연령별 담보 실태(대출계좌)

단위: 건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개인)
농신보	1.7%	6.7%	18.2%	35.6%	29.8%	7.9%	153,149
동산	0.0%	0.0%	0.0%	25.0%	25.0%	50.0%	4
보증서	0.0%	8.2%	18.8%	41.2%	28.2%	3.5%	85
부동산	0.7%	3.8%	12.5%	30.9%	31.3%	20.7%	141,028
신용	0.4%	2.4%	9.8%	28.0%	37.1%	22.3%	84,686
예금	0.8%	3.2%	11.0%	27.8%	41.3%	15.9%	629
합계	1.0%	4.7%	14.2%	32.1%	32.0%	15.9%	379,581

자료: 농협 내부자료.

□ 자금의 성격별로 자금의 규모,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지원 효과 감소

○ 정책금융사업의 특성은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사업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정책자금으로 초기 창업자금, 중기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여 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을 완화하는 데 있음.

- 하지만, 자금사업 성격별로 규모,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음으로써 사업 효과가 저감됨.

3.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주요 내용

3.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지원 규모는 3조 6,700억 원이고,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 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표 3-23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방향 및 지원 사업

구분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지원 방향	· 창업 및 시장 진입 · 성장 단계 디딤돌	· 성장 단계 진입 및 지속 성장	· 재무구조 개선 · 정상화/퇴출/재창업
지원 사업	· 창업기업 - 혁신창업 지원 - 일자리 창출 촉진 - 개발기술 사업화 · 투융자 복합금융 - 이익공유형	· 신성장 기반 - 혁신성장 유망 - 제조 현장 스마트화 · 투융자 복합금융 - 성장 공유형 - 스케일업 금융 ·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	· 재도약 지원 - 사업 전환(무역조정) - 재창업 - 구조개선 전용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 애로 및 재해/일반 경영안정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개별 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 60억 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의 70억 원)으로, 잔액 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 최대 10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함.

표 3-24 잔액 기준 예외 적용

- 혁신성장 기반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부품 영위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
- 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 사업 전환 및 사업 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 글로벌 강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
- 국가 핵심 기술 보유 중소기업
-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매칭 중소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고용부 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
- 공정위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이나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에 차등을 둡니다.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용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은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3%p 부과

표 3-25 금리 우대 사항

- 시설자금 대출기업: 대출금리 0.3%p 차감
-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대출금리 0.1%p 차감
- 고용창출기업: 고용창출 1인당 0.2%p(최대 2%p) 이자환급
 - 정책자금 대출월 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 성과기업: 1년간 0.3%p(수출 성공) 또는 0.4%p(수출 향상) 이자환급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후 수출 성공 또는 수출 향상 기업

구분	대출 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수출 성공	직수출실적 합계 10만 달러 미만	직수출실적 합계 10만 달러 이상
수출 향상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 달러 이상이고, 대출 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이자환급(고용, 수출)은 1년간 한시적용하여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투융자복합금융 등)은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용자 방식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용자 신청·접수하여 용자 대상 결정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 부담 대출을 받는 형식임.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 7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하며 협동화 및 협업사업의 경우 실천계획 승인 신청 시 업력 기준 적용

3.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3.2.1.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요

○ 2015년부터 중소기업에서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조 9,500억 원 규모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공통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지원 가능(단, 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제외)

※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여관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표 3-26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 지원 요건

구분	세부	신청 요건
성장기반 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일반)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소공인 특화자금 (자동화 설비)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대리대출)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
경영안정 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
		(고용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사업 전환)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특별)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위기지역,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소상공인, 조선사 소재 지역 ※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안군, 전남 목포시, 전남 해남군, 경남 고성군, 경남 통영시,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경남 사천시,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해당 지역에 한해 여관업(55102) 지원 가능
		(포항경영애로) 2017년 포항지진 직·간접 피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 없이 진행

(계속)

구분	세부	신청요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직접대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	(직접대출) 폐업 또는 이전 등의 사유로 임차계약 만료 전 점포정리가 필요하나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애로를 겪는 업체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직접대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
	청년고용 특별자금	(청년고용)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사업자 또는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청년특별1) 2019년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1명 고용기업
		(청년특별2) 2019년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2명 이상 고용기업

주: *는 자금별 선착순 마감.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자금별 대출금리는 분기별로 변동되고 있음.

- 2019년 7년 10일부터 2019년 3/4분기 정책자금 금리 적용

표 3-27 자금별 대출금리

구분	세부	금리
성장기반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일반) 연 2.42%
		(자동화) 연 2.22%
	성장촉진자금	(일반) 연 2.38%
		(자동화) 연 2.02%
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3년 이내 컨설팅 이수 시 연 2.02%(대리대출에 한함)
		(일반경영) 연 2.42%
		단, 장애인기업 연 2.00%(고정금리)
		(창업초기) 연 2.42%
		(고용안정 지원) 연 2.50%(고정금리)
		(사업 전환) 연 2.02%
		(소상공인특별) 연 2.00%(고정금리)
		※ (모항경영애로) 2.00%(고정금리)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긴급경영) 연 2.00%(고정금리)
		※ (긴급경영) 포함 지진피해 1.50%(고정금리)
		※ (긴급경영) 강원산불 피해 1.50%(고정금리)
	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	(임차소상공인) 연 2.42%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연계자금) 연 2.5%(고정)
	청년고용특별자금	(청년고용) 연 2.22%
	- 청년고용특별자금1	- (청년고용) 연 2.02%
	- 청년고용특별자금2	- (청년고용) 연 1.82%

주: 2014. 12. 31.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 적용금리는 위 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어 해당 은행에 문의 필요.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세부자금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 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 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 5억 원(운전자금 1억 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 원(운전자금 2억 원) 이내
- 성공불용자 2천만 원 이내

○ 세부자금별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긴급경영안정자금(강원산불)은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 (운전)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은 5년
- (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8년
- 성공불용자는 5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용자 방식에 따라 상환 방법이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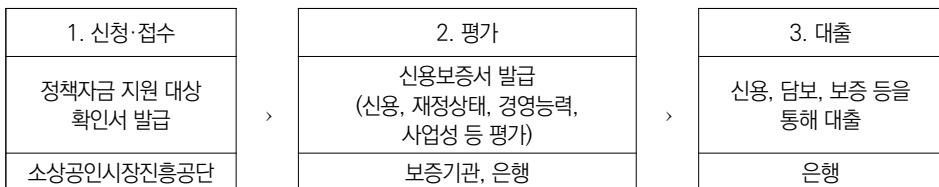
- (대리대출)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원칙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 변경 가능
- (직접대출)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거치기간 선택 가능

○ 대출 취급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한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로 총 19개에 해당됨.

○ 대출 방식에 따라 용자절차가 다름.

- (대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후 보증기관, 은행을 통해 재정상태, 경영능력 등을 평가받고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직접대출) 별도의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대출 실행
- ※ 직접대출 자금 종류: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성공불용자, 임차소상공인전용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표 3-28 대리대출 용자 절차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3.2.2.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주요 변경 내용

○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해당되는 두 가지 자금이 신설됨.

-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7등급 이하) 금융권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신설(1억 원 한도)
- 폐업·이전 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 보증금 지원 자금 신설(7천만 원 한도)

○ 청년고용특별자금 및 소상공인 긴급자금 관련 편성 예산이 확대됨.

- 청년고용특별자금 2018년 2,000억 원에서 2019년 4,475억 원으로 증액
- 소상공인긴급자금 2018년 2,000억 원에서 2019년 3,000억 원으로 증액

○ 성장촉진자금 관련 신청자격이 완화됨.

- 2018년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5년 이상 소상공인에서 2019년 3년 이상 소상공인으로 자격 완화

○ 소공인 특화자금 관련 제도가 신설됨.

-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2018년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2019년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 가능)

표 3-29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주요 변경 내용

구분	내용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청년고용특별자금(4,475억 원, 1억 원 한도), 소상공인긴급자금(3,000억 원, 고정금리 2.5%, 7천만 원 한도) 지원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
정책자금 수요 맞춤형 지원(직접대출)	-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조기상환 시 상환수수료 면제, 법인기업 대상 연대보증 폐지('18년~)
금융소외계층 지원 강화	-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7등급 이하) 금융권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신설(1억 원 한도) - 폐업·이전 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 보증금 지원 자금 신설(7천만 원 한도)

주: 신규 고용창출 소상공인에 직접대출 시 가점 부여(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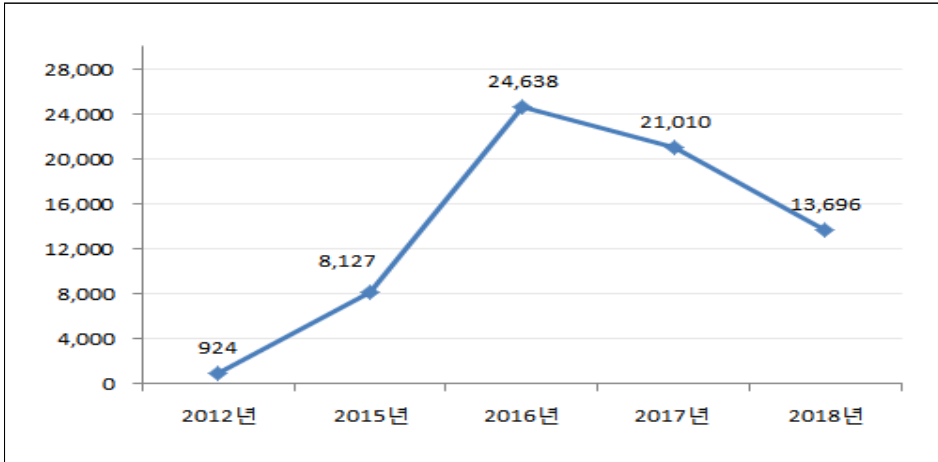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3.2.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현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에 지원한 기업은 2012년 924개에서 2016년 24,638개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함.

그림 3-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의 연도별 지원 기업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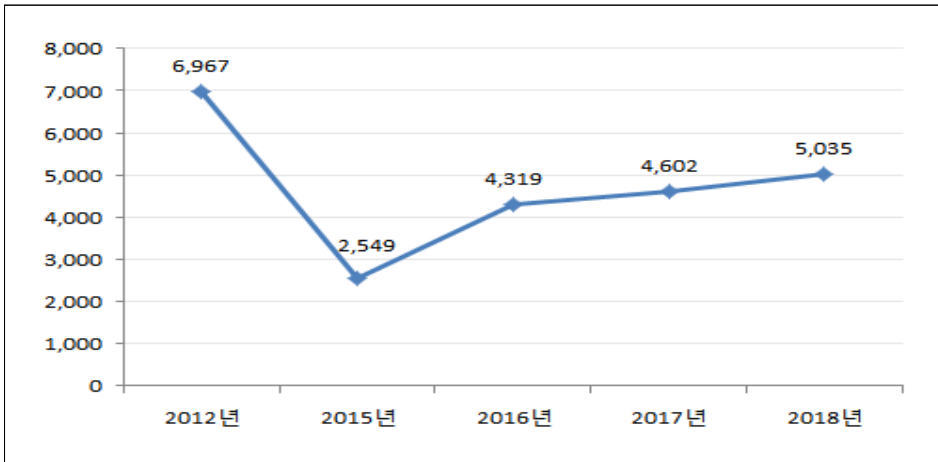
자료: 기업마당(www.bizinfo.go.kr).

○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의 평균 지원 금액은 5,035만 원으로 2,549만 원을 지원했던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6,967만 원이었던 평균 지원 금액은 2015년까지 대폭 감소

그림 3-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의 연도별 평균 지원 금액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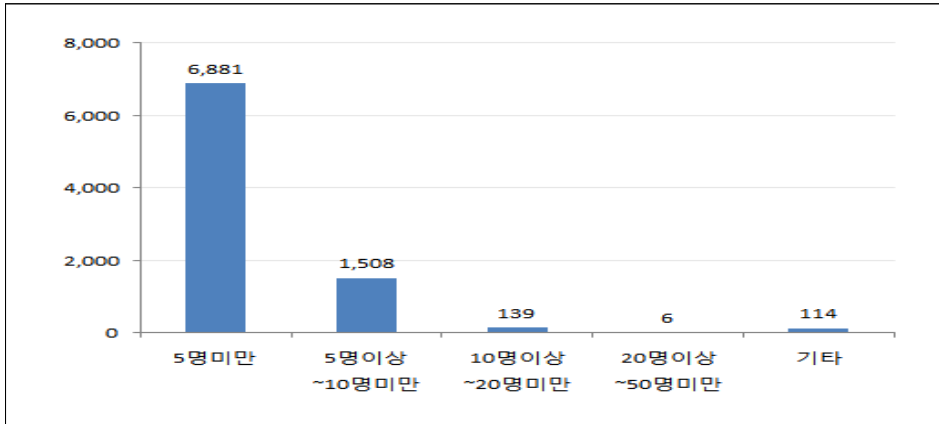


자료: 기업마당(www.bizinfo.go.kr).

○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에 지원한 기업을 근로자 수별로 분류하였을 때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기업이 6,881개로 가장 많았음.

그림 3-5 2018년도 근로자 수별 지원 기업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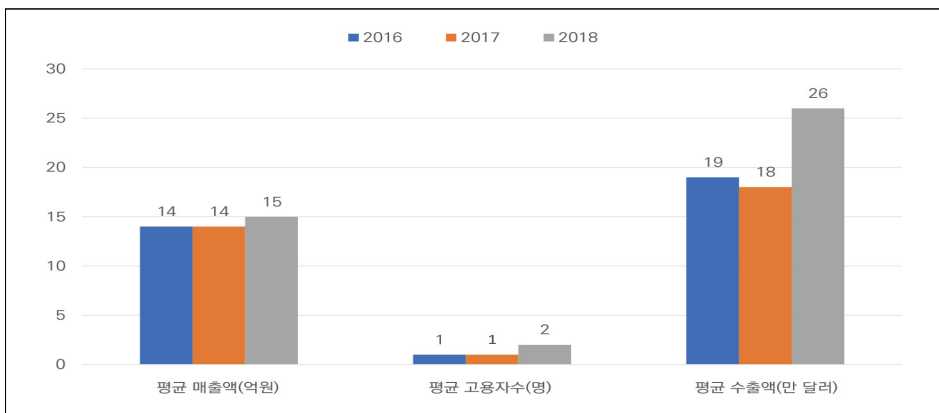


자료: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평균 매출액, 평균 고용자 수, 평균 수출액 모두 상승 추세를 보여줌.

- 특히 평균 수출액은 2017년 18만 달러에서 2018년 26만 달러로 상승

그림 3-6 연도별 지원 기업 경영성과 현황



자료: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4장

포용적 금융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금융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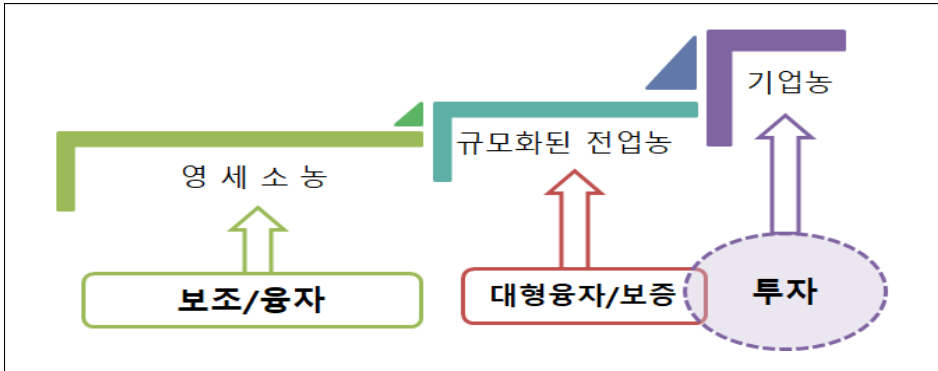
4

포용적 금융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금융 과제

1. 자금의 효율적 배분으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

- 단순한 자금 조달 방식은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맞춤형 정책의 한계로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농업이 규모화·전문화됨에 따라 개인 자산을 담보로 하는 자금 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투자 확대 등 다양화가 요구되지만, 현재 농업금융에서는 자산을 담보로 융자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정책자금도 이러한 방식에 집중되어 있음.
- 농업부문의 특수한 투자 환경으로 인해 자금 조달 수단을 차별화하고 목적이 다양한 자금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영세 가족농에게는 여전히 정책자금융자와 보조가 유용한 자금 조달 수단임.
 - 규모화된 기업농에게는 대규모 보증 및 융자, 투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4-1 농가유형별 자금 조달 지원 수단 차별화



자료: 저자 작성.

- 유형별 자금 조달뿐 아니라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 지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즉, 담보가 부족한 신규진입, 창업농에게는 보증 중심 정책자금 지원, 성장 단계에서는 담보부 융자 및 투자 방식으로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 지원 보강

- 농업부문은 재해위험 등 농가가 직면하는 경영위험이 커 수익의 변동성이 높은 편임. 정책보험의 특성상 당해년 수입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생산 기반이 무너진 농가의 경우 재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금융 지원 사업이 필요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영회생 관련 사업 중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업 관련 채무의 대환, 피해복구자금, 시설개보수 자금, 운영자금 등 경영위기에 벗어 나기 위한 용도의 자금임.

- 농업대출 연체가 아닌 농업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 농가는 시설개보수, 운전자금 등에 대해 신규 대출이 가능함.
- 하지만, 신용등급 구분에 따라 디딤돌 대출 등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저신용등급 기업, 개인에 대한 대출자금이 있는 타 분야와 달리 농업부문은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하락분에 대한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심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농업경영위기(예시)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만을 규정하고 있고 재해 정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 농가 혹은 수입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농가에 한해 대출 심사 단계를 완화함으로써 대출심사 단계의 리스크를 대출기관에서 정부로 이전되게끔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신용대출을 대손보전기금 대상 자금으로 편입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 4-1 농업경영위기(예시)

① 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폭염, 병충해,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 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 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전년 대비 농업용 원자재(비료·농약·사료·유류·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거나 농산물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15% 이상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정보,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 15%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서 제출 필요
- 기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http://uni.agrix.go.kr>).

3. 과대채무 농업인·농가에 재무상담 제공

- 경영회생자금과 관련하여 정책자금의 지도금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자금 지원의 사후관리는 대출기관에서의 연체율 점검에 그치고 있고, 농업종합자금이라 하더라도 당해년 재무 및 손익 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음.
 - 특히, 경영회생자금 지원이 활성화될 경우 지도금융 역할이 더욱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대출담당기관 및 담당자에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경영회생자금 등 저신용 농가(부채비율이 높고, 악성채무가 있는 농가)에 대한 재무상담 등은 정부와 대출기관이 매칭하여 수수료 부담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4. 영세고령농 등 농촌 취약계층의 생활금융 지원

- 농업부문 포용적 금융을 위해서는 영세고령농 등 농촌 취약계층의 생활금융 부족 자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 농촌 취약계층의 경우 정부 공적보조금 이외에 자금 대출은 어려운 상황임.
- 현실적으로 단기 대출자금인 농축산경영자금(6백만 원 이하) 등을 생계비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대출 목적에 어긋나는 지출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할 경우 향후 경영자금 대출이 어렵게 되고, 현 대출자금에 대한 회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자금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 초고령화된 농촌 현실에서 영세 고령농의 경우 물리적 노동을 해야만 생계자금 보전이 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임.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전자금대출, 금리가 높지만 정부지원대출인 햇살론, 사잇돌 대출 상품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전자금대출은 대부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약 7일이 소요됨.
 - 대상자는 용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⁴⁾인 월평균 소득 259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임.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사업 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로 구분되므로

4)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 중이어야 하며,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필요한 용자종목으로 신청하는 것임.

- 용자종목별 한도액은 차등을 두고 있음.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 원 한도, 임금체불생계비 역시 한도는 1,000만 원 이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용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용자 가능함.
-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함.

참고문헌

- 김미복·오내원·황의식. 2016a.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농정포커스』 제13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미복·황의식·박준기·전영현. 2016b.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제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승준. 2016. “SDGs와 농업개발: 식량안보와 포용적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세계농업』 168: 71-86.
- 마상진. 2019. “농업·농촌 일자리 증가, 어떻게 볼 것인가.” 『농업전망 2019: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재. 2012. 2. 『농업정책금융 전담기구 설립방안 검토』. 농식품부 농업정책포럼 발표자료.
- 유찬희·김정섭·김태훈·최용호·오내원·박지연·임준혁. 2019. 『농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1/2차년도)』. R8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찬희·임지은. 2015. “시설원에 품질개선사업.” 『현장브리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소영·황의식. 2018.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효율화 등 정책자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_____. 각 연도. 『귀농어·귀촌인 통계』.
- _____.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_____. 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세계경제포럼의 포용적 성장 모델.”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제59호.
- Derek Byerlee, Xinshen Diao and Chris Jackson. 2005. *Agriculture, Rural Developtment, and pro-poor growth*. World Bank.

〈참고 인터넷 사이트〉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검색일: 2019. 7. 31.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https://opn.gosims.go.kr/>>. 검색일: 2019. 7. 26.
- 기업마당. <www.bizinfo.go.kr>. 검색일: 2019. 8. 10.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uni.agrix.go.kr>>. 검색일: 2019. 8. 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검색일: 2019. 8. 1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검색일: 2019. 8. 10.
- UN DESA. <<https://www.un.org/development/desa/en/key-issues/financing.html>>. 검색일: 2019. 9.27.